

황 경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 변화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영 아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 변화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황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사회교육전공

김 영 아

# 인 준 서

김영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심사위원————— 印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과 교과서가 되기 위한 개선점과 보완점을 제시한다는 최종적인 목적 하에,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일교육 내용 변화와의 관계를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일교육이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의 내용은 환경과 인식이라는 큰 틀과 연계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통일이 하나의 역사적 과정임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의 내용 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해방이후 현재까지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천을 거시적 측면에서 고찰하였을 뿐 아니라, 제1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일반사회 영역의 교과서들을 통일교육의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북한 관련 내용 전개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통일교육을 지향하는 사회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적 개선점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통일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데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통일교육정책의 내용과 실제 전개된 교육내용을 하나의 통일된 조직체로 파악하고 있던 시각에서 벗어나 양자의 실체가 상호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연구자는 관련 제요인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시기를 반공교육 시기·안보교육 시기·평화통일교육 시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기에

서의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통일교육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 안에서 전개되었던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공교육시기(1948-1987)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 4차 교육과정까지의 시기로서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공고화되었다가 데탕트가 진행된 시기이다. 남북관계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다. 특히, 통일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이라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면서 통일교육 정책은 대결과 비방 위주의 경직성을 띠었다. 따라서 이 시기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부문에 있어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혹은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는 존재로 묘사되어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적대심을 극대화하고 이질화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둘째, 안보교육시기(1988-1997)는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부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교육과정상 제5, 6차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국제적으로는 탈냉전의 시기로서 동구권이 몰락하고 소련 연방이 붕괴되었으며,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실리 외교가 더욱 가시화된 시기이다. 국내적으로는 제도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 합의서를 도출하는 등 일단의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정책의 목표에서는 북한을 대화와 대결의 균형선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은 반공교육기의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방대한 비판을 축소 혹은 삭제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정보가 협소하게 제공될 뿐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남북한의 이질성을 방조·방관하는 교과서

로 특징지을 수 있다.

셋째, 평화통일 교육 시기(1998-현재)는 ‘대북포용정책’을 표방한 김대중 정권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권의 시기로서 제7차 교육과정의 포함된다. 이 시기는 미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 세계질서가 지배되는 시기로서, 핵문제로 인해 파생된 북·미 갈등이 한반도의 또다른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 각 부문에서 상당한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나 IMF 이후 경제난이 사회 내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해진 시기로서 당위적이고 감정적 차원에서의 통일교육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을 전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북한에 관련된 정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가치와 태도를 직접 서술하던 종전의 기술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북한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징을 가진다. 교과서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지표와 근거들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해석과 판단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의 사회과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 가치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북한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실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보다 세심하게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에 명기함으로써 통일교육 목적과 목표에 따른 내용의 일관성을 꾀하는 한편, 설정된 통일교육의 목적과 목표달성을 유도하는 교육내용이 조직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내용 .....	6
3. 연구의 방법과 증거들 .....	11
1) 연구의 방법 .....	11
2) 연구의 증거들 .....	12
4. 연구의 제한점 .....	21
<b>II.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b> .....	23
1. 반공교육기의 통일환경 .....	23
1) 국제환경 .....	23
2) 국내환경 .....	28
3) 남북관계 .....	31
2. 안보교육기의 통일환경 .....	34
1) 국제환경 .....	34
2) 국내환경 .....	37
3) 남북관계 .....	39
3. 평화통일교육기의 통일환경 .....	41
1) 국제환경 .....	41

2) 국내환경 .....	45
3) 남북관계 .....	46
<b>Ⅲ.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b>	<b>50</b>
1. 반공교육 시기 .....	50
1) 통일교육정책 .....	50
2)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 .....	54
2. 안보교육 시기 .....	60
1) 통일교육정책 .....	60
2)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 .....	62
3. 평화통일교육 시기 .....	66
1) 통일교육정책 .....	66
2)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 .....	67
<b>Ⅳ. 사회과 교과서의 북한 관련 내용 분석 .....</b>	<b>70</b>
1. 반공교육 시기 .....	70
1) 제1, 2차 교육과정 .....	70
2) 제3, 4차 교육과정 .....	81
2. 안보교육 시기 .....	94
1) 제5차 교육과정 .....	94
2) 제6차 교육과정 .....	98
3. 평화통일교육 시기 : 제7차 교육과정 .....	102

<b>V. 결론</b> .....	107
1. 요약 및 평가 .....	107
2. 제언 .....	114

## 참 고 문 헌

## ABSTRACT

## 그림 목차

<그림 1-1> 통일교육의 추진 체계 .....	5
<그림 1-2> 학교통일 교육 정책의 추진과정 .....	8
<그림 1-3> 사회과의 북한 관련 내용 구성의 과정 모형 .....	9
<그림 4-1> 공산 독재의 선거 제도 .....	75
<그림 4-2> 북한공산치하의 학생 강제 동원 .....	77
<그림 4-3> 협동 .....	84
<그림 4-4> 북한주민의 강제노동 .....	84
<그림 4-5> 북한의 최고 인민 회의 .....	96

## 표 목 차

<표 1-1> 통일교육 변화 시기 분류의 비교 .....	15
<표 1-2> 통일교육의 시기 구분 준거틀 .....	16
<표 1-3> 내용분석의 준거틀 .....	20
<표 3-1> 제1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영역 반공교육 관련 단위 내용	55
<표 3-2> 제2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반공교육 관련 단위 내용 .....	56
<표 3-3> 제3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영역 통일관련 내용 .....	57
<표 3-4> 제4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영역 통일관련 지도목표와 특이 사항 .....	58
<표 3-5> 제5차 교육과정 <정치경제> 통일관련 단위 내용 .....	63
<표 3-6> 제6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통일관련 단위 내용 .....	64
<표 3-7> 제7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통일관련 단위 내용 .....	69
<표 4-1> 제1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 어구 .....	72
<표 4-2> 제2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 어구 .....	78
<표 4-3> 제3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 어구 .....	85
<표 4-4> 제4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 어구 .....	88
<표 4-5> 제5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 어구 .....	97
<표 4-6> 제6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 어구 .....	101
<표 4-7> 제7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 어구 .....	10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는 북한의 행상을 고착화시켰고, 냉전이 와해되고 국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여전히 ‘적(敵)’으로 인식되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00년 남북 간의 정상이 나란히 악수를 나누는 모습은 남북관계에 있어 지극히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온 민족은 분단 이후 정치적 사건에 의해서는 유일무이한 환희를 함께 느꼈다. 북한은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고, 곧 통일이라도 될 듯한 들뜬 분위기 속에 낙관적인 기대와 전망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핵문제와 관련한 북·미 갈등과 국제사회의 조류 속에서 또 한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통일’의 문제가 우리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민족의 지혜와 응집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현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이다. 우리가 처해있는 통일 환경을 냉철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환경에 대한 인식, 그것은 우리의 패러다임<sup>1)</sup>을 창출한다. 환언하면, 패러다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 조성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현상 또는 사회적 실재란, 자연현상처럼 사람과 동떨어진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생각·언어·개념 등으로 구성(constitutive)되는 것이고, 그들의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sup>2)</sup>이다. 우리의 생활은 일정한 패러다임 하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 제분야의 행태들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틀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이 학생과 시민들로 하여금 미래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후 실질적인 민족 통합을 이끌어 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sup>3)</sup>한다고 할 때, 통일교육 패러다임은 ‘통일환경 속에

- 
- 1)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토마스 쿤에 의하여 사용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패러다임이란, 한 과학 내부에서의 가장 넓은 일치의 단위로서 하나의 과학 공동체와 다른 과학 공동체를 구분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특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특정한 패러다임 속에서 고위 정상과학(normal science)은 지식을 축적하면서 패러다임을 확장시켜 나가지만 이 과정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고 이 비정상적인 현상(anomalies)이 증대되면 패러다임의 위기가 출현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하여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게 됨으로써 과학혁명(scientific revolution)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Kuhn, T.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1970 : 조형 옮김, 「과학혁명의 구조」(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비론 쿤의 논의는 자연과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정신과학, 특히 사회과학의 영역에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사회학에 있어 로버트 프리드리히(R.Friedrichs), 앤드류 에프래트(A.Effrat), 조지 리처(G. Ritzer) 등은 사회학이 몇몇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구성된 복합 패러다임의 학문이라고 보았다. 예컨대 리처는 현대 사회학이 그가 ‘사회적 사실(social fact) 패러다임, 사회적 정의(social definition) 패러다임, 그리고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이라고 부른 세 유형의 주요한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되어 있다고 보았다.(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서울: 민음사, 1998), p.20.)
- 2) 김경동,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서울: 박영사, 1989), p. 18.
- 3) 차우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침 및 교육방법 개선 연구”, 이장희 외 공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아사연학술포럼시리즈, 2003-5,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3), p. 32.

서 통일의 준비와 대비를 위한 통일교육의 목적과 방법의 전제가 되는  
가시적·비가시적 주의(ism)·주장들의 합의된 공통의 인식틀'이라 정  
의할 수 있다.

통일교육정책의 수립은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  
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에 의  
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문화적 지각을 제도화 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통일교육 패러다임과 통일교육정책은 '통일환경'이라는 공통의 변인을  
갖고 있지만, 통일교육 패러다임은 제도화라는 시간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며 보다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인식이 제도보다 선행된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  
일교육 패러다임이라는 인식 속에서 정책이 전개된다고 해도 무리가 없  
을 것이다.

물론 통일교육 정책이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합의의 완전성을 내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환경의 변화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통일교육 패러다임 안에서 추출되어 표면화된 산물인 통일  
교육정책은 시대적 주류를 형성하는 기본적 가치와 인식을 읽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sup>4)</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요  
인을 통일교육 정책의 변화 요인과 연계하여 분석할 것임을 밝힌다.

이 작업은 통일교육 패러다임이라는 우리의 인식이 어떤 과정에 의해  
제도화되었는가를 밝히고 통일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다

---

4)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해 연구자는 통일교육 패러다임과 통일교육정책의 전개 방향  
이 같다고 전제하고 있다.

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더러, 각 요인들의 위계를 도출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이런 일차적 작업 위에 부차적으로 던질 수 있는 의문은, 과연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이 실제 통일교육패러다임의 전개에 발맞추어 진행되었느냐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sup>5)</sup>으로서 국가에서 마련한 일정한 교육지침에 따라 학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실제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교과서는 이러한 국가수준의 교육방향을 담고 있는 구체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는 순응의 관계이며, 교과서는 국가의 정책적 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체계를 살펴보면 통일부와 교육부로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일교육의 대상이 범국민적이라는 점에서 <그림1-1>에서와 같이 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으로 분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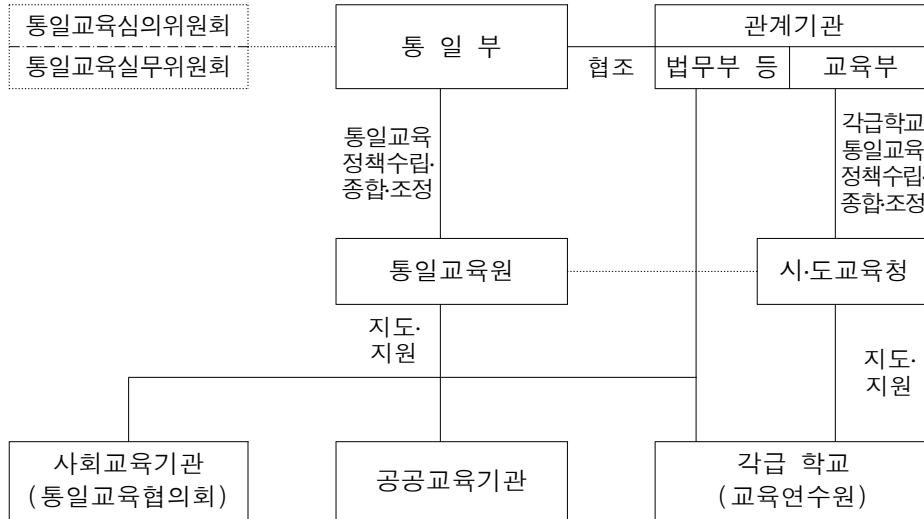
이론적으로는 상호협조체계를 갖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교육부의 책임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괴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교과서 집필자와 정책 결정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에 기인하는 또 하나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집필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과 경험이 교과서에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

5) 교육법 제155조 1항

6) 통일부통일정책실(2004), 「2005통일교육지침서」, p. 9.

<그림 1-1> 통일교육의 추진 체계<sup>6)</sup>



오늘날 교과서는 실제 수업에 있어 기준으로 제시되는 하나의 교과용 도구로 규정되지만, 교육지침서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제 학교에서의 수업 관행을 고려할 때 교과서의 내용이 실제 교육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연구자는 학교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였을 통일 교육과정의 실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의 표면적 지식보다는 내용이 주는 메시지(communication message)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꼈다. 여기서 표면적 지식이란 교과서 내용의 일반적 진술을 의미하며, 메시지만 그러한 진술이 내포하는 가치의 측면, 즉 함축하는 주장과 의미를 뜻한다. 의미의 본질을 알아내기 위해선 교과서의 대북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이 작업은 통일교육패러다임

안에서 도출된 통일교육정책(교육과정상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실제의 교육내용(교과서에서의 통일교육)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북한을 향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일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교과서에서의 대북 인식을 되돌아 보고, 통일을 지향하는 교과서가 되기 위한 개선점을 북한 기술(description)의 측면에서 탐색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i)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요인인 통일환경의 제요인들을 시대·역사적으로 고찰하고 ii) 실제 통일교육정책의 변화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통일환경 요인 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의 위계를 밝히며, iii) 실제 학교통일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 변화’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처해 온 통일환경 속에서 전개된 통일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평가하고, 보다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열어가기 위한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보완점을 모색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사회과의 역할을 재조망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본 논문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과 교과서가 되기 위한 개선점과 보완점을 제시한다는 최종적인 목적 하에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 속에서 진행된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 내용을 분석·평가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통일환경의 변화 요인을 폭넓게 살펴본다. 본 연구에 있어 통일환경을 고찰함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정책은 통일환경이라는 배경 하에서 전개되는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치학자 데이빗 이스튼(D. Easton)은 ‘모든 체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요구와 지지를 투입되면 이를 전환시켜서 정책을 산출한다’<sup>7)</sup>는 체제론적 사고 방식을 전개해 왔다. 이렇게 볼 때 통일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통일환경이 교육정책 변화의 요인이자 배경이 된다. 통일환경은 분석의 차원에 따라 외부환경인 국제환경, 내부환경인 사회구조·정치경제적 상황·국민의식 등과 남북관계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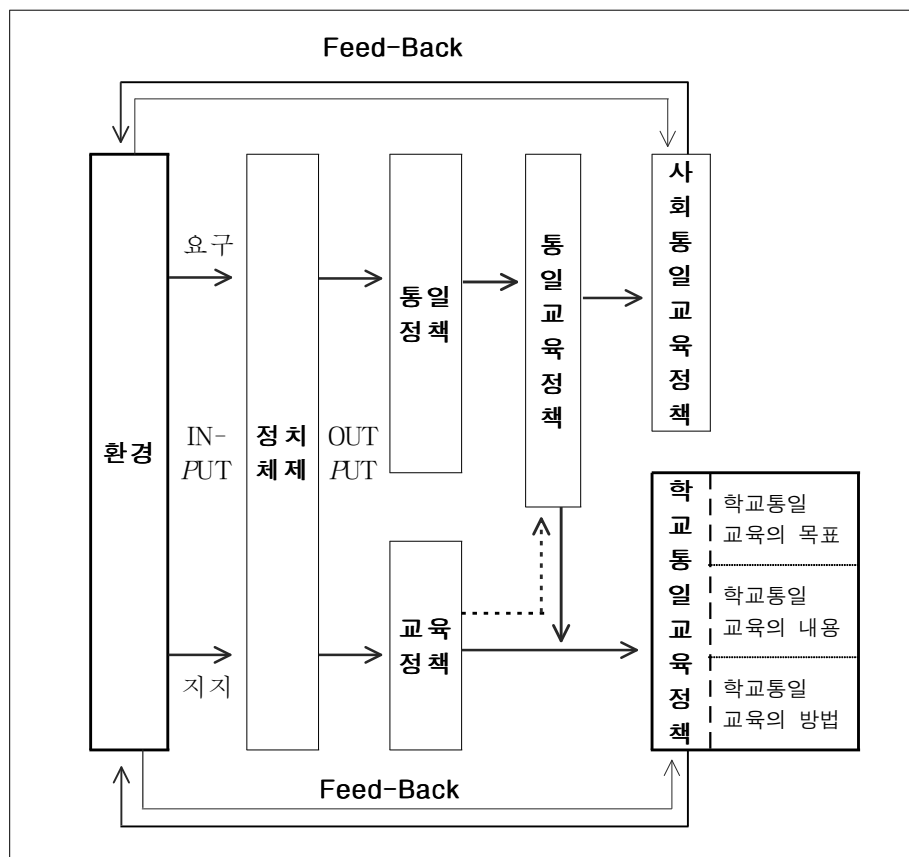
통일환경이 통일교육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를 도식화하면 <그림1-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 그림은 통일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요구와 지지를 통해 정치체제에 반영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육정책이 수립됨을 나타낸다. 역으로 정책이나 인식이 통일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패러다임 전환의 근본 요인인 통일환경 요인을 국제적 환경, 국내적 환경, 남북관계 환경 요인으로 나누어 분단 이후 이들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통일의 가능성은 통일 관련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정치과정이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

---

7) David Easton, *A Far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5), pp. 111-112.

화는 궁극적으로 통일환경의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이후 연구의 선행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1-2> 학교통일 교육 정책의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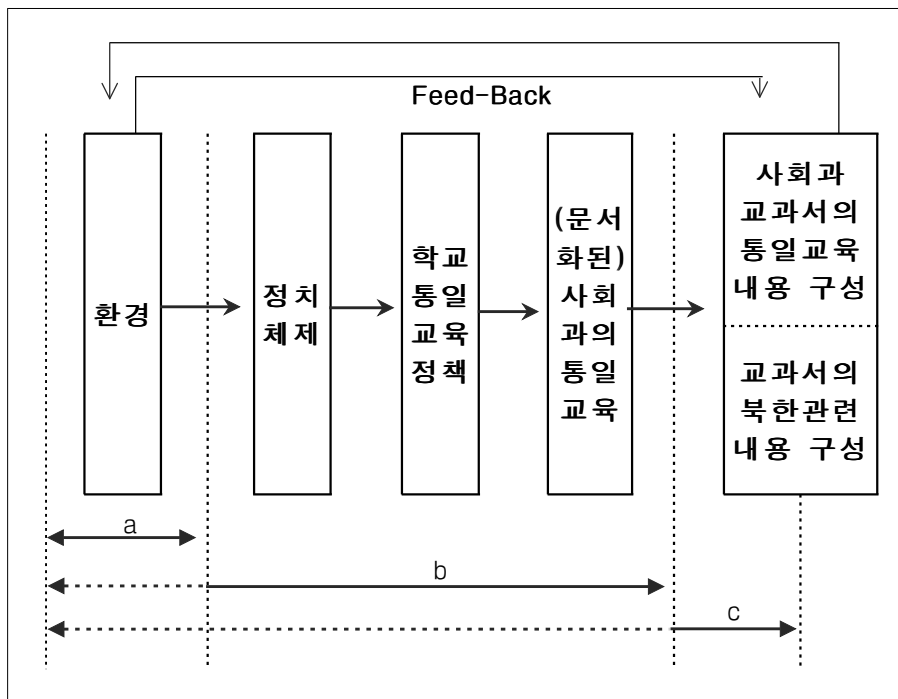


※자료: D. Easton, *A Far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5), p. 110. : 통일부통일정책실(2004), 「2005통일교육지침서」, p. 9 를 참조로 재구성.

III장에서는 변화된 통일환경 속에서 통일교육정책 및 사회과 교육과정

상의 목표와 내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은 통일 환경 속에서 정책 실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통일환경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장차 통일정책 및 통일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정치적 변인들을 통제하고, 보다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림1-3> 사회과의 북한 관련 내용 구성의 과정 모형



※ a: II장의 연구내용, b: III장의 연구내용, c: IV장의 연구내용

IV장에서는 실제 사회과 안에서 통일교육이 어떻게 수행되어져 왔는가를 교과서 내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절대적인 지침서로서 교과서에 반영된 북한에 대한 인식은 바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전제해도 무리가 없다.

북한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는 것은 통일교육의 내용 변화를 알아보는 일차적 성과 외에 다음 두 가지 측면의 의의를 더할 수 있다. 하나는 교과서에서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했는가를 통해 학교교육적 측면에서 남북관계 이질화의 원인과 그 과정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교과서의 대북 인식관을 발견함으로써 공식적인 교육과정<sup>8)</sup> 이면에 있는 실제 학교의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보다 근접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1-2>를 통일정책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생략하고 ‘사회과 교과서의 북한 관련 내용 선정과 조직’을 최종 종착으로 하여 더욱 간단히 모형화하면 <그림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a, b, c 각 구간은 각장의 연구내용과 범위를 의미하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장의 연구 내용이 선행적으로 수행됨을 의미한다.

---

8) ‘교과서의 대북 인식은 통일교육정책과 같은 맥락과 기초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은 본 논문의 중요한 문제의식 중 하나이다.

### 3. 연구방법과 준거틀

#### 1) 연구의 방법

설정된 연구 내용에 따라 수행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를 토대로 통일환경 변화를 고찰하였다. 통일환경의 수준을 국제환경·국내환경·남북관계로 나누고 정부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기관의 문서, 연구논문, 단행본 자료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에서 통일환경 변화 요인을 짚어보았다.

Ⅲ장에서 통일교육정책의 변화와 사회과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 변화를 문헌 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전(前)장에서 살펴본 통일환경이 실제 정책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거시적 측면에서 통일교육 정책의 변화를 짚어봤으며 이 안에서 설정되었던 사회과 내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목표와 내용들을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 작업은 혹시 범하였을 수 있는 시대착오적, 탈통일지향적인 정책적 과오의 원인을 밝히고 앞으로의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 하나의 지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Ⅳ장에서는 교과서에서 북한관련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

기 위해서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점이 있다.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교육과정상의 교과서 내용을 인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교과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제1차 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일반사회 교과서 내에서 임의로 선택하였음을 밝힌다.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 편제에 약간의 변동이 있기에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이 고루 섞이도록 대상을 선정하였다. 단, 실증적 체계를 요하는 법영역은 교과서에서의 북한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를 파악한다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이 되는 교과서의 특정단원이나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교과서 전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주분석대상은 교과서의 텍스트이며, 삽화나 사진은 참조자료로 활용하였다.

## 2) 연구의 준거틀

### ① 시기분류의 준거틀

통일교육의 시기 구분에 있어서는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이재봉, 황병덕, 박찬석, 이근철·오기성, 한만길, 최선옥 등의 연구가 있다.<sup>9)</sup>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

9) 이재봉, “한국 정치교육 발달의 체계적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논문, 1991);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박찬석, “한국의 통일교육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1998); 이근철·오기성, 「통일교육론」(서울: 엑스퍼트 월드, 2000);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01); 최선옥, “한

통일교육 변화의 분류 기준으로써 통일교육의 성격변화·교육과정의 변천·정권 변화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차원에서 분류하고 있거나 두가지 정도를 고려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이재봉은 정치변동·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 시기·교육사조의 변화 등을 통일교육의 변천 시기로 파악하여 ‘국가체제 수립과 존속을 위한 정치교육(1945~1960)·확산지지와 동원을 위한 정치교육(1961~1972)·산출의 증대와 구열 소멸을 위한 정치교육(1972~1979)·요구증압해소와 체제수호를 위한 정치교육(1980~1987)·정치문화 수준과 가동력 향상을 위한 정치교육(1988~)’으로 구분하였다.

황병덕은 발전적 시각에서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파악하였다. 또한 통일환경의 변화를 기준으로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반공교육시기(1948~1987), 통일·안보교육 시기(1988~1991), 통일교육 시기(1992~1997)’로 나누었다.

박찬석의 연구는 정치구조의 변화를 가장 큰 기준으로 하여 국내외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통일운동, 통일정책 등 다각적인 변화의 요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통일교육정책의 변화를 ‘정부 수립 및 과도기의 통일교육(1948~1960년대)·군부통치기의 통일교육(1961~1987)·민주주의 이행기의 통일교육(1988~1997)’로 분류하였으며, 분류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근철·오기성은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통일교육의 성격 변화와 정권 변천 및 교육과정에 따라 분류하였다. ‘반공교육기(미군정~제1공화국, 제1차 교육과정기)·승공통일기(제3~4공화국, 제2~3차 교육과정

---

국 통일교육 변천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기), 안보교육기(제5공화국, 제4차 교육과정기)·통일안보교육기(제6공화국, 제5차 교육과정기)·통일교육기(김영삼 정부~, 제6차 교육과정~제7차 교육과정)’로 분류했다.

한만길은 통일교육이 정치적인 변화 그리고 정치교육 이념의 변화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고 밝히면서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명칭과 성격을 기준으로 ‘반공교육기(1948~1980년대 중반)·통일안보교육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통일교육기(1992~ )’로 구분했다. 한만길의 연구는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정치적인 시각에서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있다.

최선옥은 통일교육의 성격변화를 기본으로 하되 박찬석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의 변천 요인을 복합적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민주화의 이전과 이후, 남북정상회담 개최시기를 부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반공 중심의 통일교육(1948~1989)·안보 중심의 통일교육(1990~1999)·공동체 중심의 통일교육(2000~ )’으로 분류하였다. 최선옥의 연구는 통일교육이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잘 파악하고, 통일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하지만, 2000년 이후의 통일교육을 ‘공동체 중심’으로 보는 것은 현재의 통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방향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sup>10)</sup> 오히려 현재 통일교

---

10) 현재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 영역은 북한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북한이해교육,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평화교육, 북한을 공동의 파트너로 인식케 하는 민족공동체교육, 통일에 있어 민주주의의 의미와 유용성을 파악하는 민주시민교육, 기존의 소극적 안보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안보 개념으로서의 안보교육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추병완 외, 「통일교육」(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2), pp. 11-44를 참조할 것) 각 내용 영역 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의미와 이론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공동체 중심’으로 묶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육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하는 목적이 무력을 억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으로 구분짓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하다.

<표1-1> 통일교육 변화 시기 분류의 비교

연구자			이재봉 (1991)	황병덕 (1997)	박찬석 (1998)	이근철 오기성 (2000)	한만길 (2001)	최선옥 (2004)
45	1공화국 (이승만)	교수 요목기	국가체제 수립과 존속을 위한 정치교육	반 공 교육	정부수립 및 과도기의 통일교육	반 공 교육기	반 공 교육기	반 중 심 의 통일교육
50		1차교육 과정						
55	2차교육 과정		3공화국 (박정희)	산출증대와 구열소멸 을위한 "	통 일 안 보 교육기	통 일 안 보 교육기	안 보 통일교육	
60		3차교육 과정						4공화국 (박정희)
65	4차교육 과정		5공화국 (전두환)	정치문화 수준과 가동력향 상을위한 "	통 일 교육기	통 일 교육기	안 보 통일교육	
70		5차교육 과정						6공화국 (노태우)
75	6차교육 과정		김영삼	통 일 교육	통 일 교육기	통 일 교육기	안 보 통일교육	
80		7차교육 과정						김대중
85	7차교육 과정		노무현	통 일 교육	통 일 교육기	통 일 교육기	안 보 통일교육	
90		7차교육 과정						노무현
95	7차교육 과정		노무현	통 일 교육	통 일 교육기	통 일 교육기	안 보 통일교육	
00		7차교육 과정						노무현

이와 같은 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 통일교육의 시기 분류에 있어 지표로 삼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의 목적과 목표 변화를 가장 중요한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교육 목적에 따라 그 내용·방법·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가장 기본적인 준거가 될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은 여러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지는 정치·과정이라는 인식하에 통일환경(국제환경·국내환경·남북관계)의 변화를 폭넓게 고려하여 통일교육의 시기를 구분하였다.

셋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통일교육의 방향을 전환시킨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최선욱의 연구에 의견을 같이 하는 바 이를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변화가 표면화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통일교육 변화의 주요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을 토대로 연구자가 설정한 통일교육의 시기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1-2> 통일교육의 시기 구분 준거들**

시기	반공교육 패러다임 (1948-1987년)	안보교육 패러다임 (1988-1997년)	평화통일교육 패러다임 (1998-현재)
교육 과정	교수요목기 ~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제6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
정권	제1-5 공화국	제6공화국, 김영삼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국제 체제	냉전체제(냉전공고화▶미소 데탕트▶소연방붕괴)	탈냉전체제	신국제질서

통일 교육 목표 및 내용	정치적·이념적 반공교육	평화통일·무력통일 대비 교육	평화공존 및 화해 협력 교육
	국가방위 목적의 대북한 적개심 고취 및 대결 교육	남한 우월성 전달 위주의 북한실상 전달 교육	객관적 북한 인식 강화 교육

## ② 내용분석의 준거틀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의 분석에 있어 기본적인 구조는 오스굿(C.E. Osgood)의 ‘평가적 주장문 분석’(Evaluative Assert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평가적 주장문 분석이란 사물을 평가하는 문장(커뮤니케이션 메시지)들을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다. 오스굿은 문장들이란 하나의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sup>11)</sup> 그리하여 메시지들을 2개의 일반적인 주장문 형태들 가운데 하나로 바꾸어 구성 요소들에 숫자 값을 부여하고, 문장에서 가르키는 서술의 대상에 대한 문장의 태도와 의미에 각각 +, - 의

11) 오스굿은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텍스트를 아래 두 형태로 바꾸었다. 아래에서 태도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가리킨다.

형태 1	태도목적어1 - 동사연결어 - 공통의미어
형태 2	태도목적어1 - 동사연결어 - 태도목적어2

예를 들어 “북한은 침략적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북한은 침략적이다’(형태1)과 ‘북한은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로 바꿀 수 있다.

① 태도목적어1(북한) + 동사연결어(이다) + 공통의미어(침략적) = 형태1  
→ ‘북한은 침략적이다.’

② 태도목적어1(북한) + 동사연결어(계속하고 있다) + 태도목적어2(망동) = 형태2  
→ ‘북한은 망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분석의 핵심은 태도목적어(대상)에 대한 공통의미어와 태도목적어가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사연결어·공통의미어·태도목적어를 수치화함으로써 내용분석에 있어 강도척도의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점수값을 부여하고 호의적·중립적·비호의적 등으로 나누었다. 또한 문장에 표현된 동사의 시제(과거·현재·미래·진행형·완료형 등)에 따라서도 각각의 점수값을 달리했는데 특히 현재진행형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내용분석 방법은 흔히 언론 보도의 내용분석에 많이 이용되었으며, 중립적 태도를 요하는 발행물의 태도 분석에 활용되었다.<sup>12)</sup>

사회과 교과서는 통일교육에 있어 가치중립적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2005년 <학교통일교육지침서>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사회과와 도덕과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도덕과는 도덕적 가치와 인륜, 인류 보편적 가치 등에 입각한 평가능력과 적극적인 해결태도 함양을 목표로 하는 반면, 사회과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행동 영역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에서는 북한의 지리·사회·경제적 환경·남북한의 근현대사를 통해 통일·북한관련 문제를 이해시키는 목표설정을 갖고 있다. 특히, ‘일반사회’로 분류되는 ‘인간과 사회’ 영역에서는 남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실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주요 특징들을 다루어야 한다.<sup>13)</sup> 즉, 도덕과는 가치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중요시 하는데 반해, 사회과에서는 객관성에 기반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근거한 판단 능력의 배양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북한 관련 내용 전달

---

12) Ole R. Holsti, "Evaluative Assertion Analysis", Robert C. North, et al., eds., Content Analysis,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3), pp. 94-95. : 안영섭, 「사회과학방법론총설」(서울: 법문사, 1966), pp. 227-228.

13) 통일부통일교육원, 「2005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서울: 통일부, 2004), pp. 80-81.

에 있어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야 하나, 주지하듯이 정치적·사회구조적 한계에 의해 ‘북한의 객관적 이해’에 대한 인식이 일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sup>14)</sup>

사실 오스굿의 평가적 주장문 분석은 매체가 전달하려는 주요 주장의 핵심을 파악하고, 서술 대상에 대해 갖는 태도를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 방법이지만,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종합하는데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 또한 냉전시기 우리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북한이 ‘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본 논문은 기술된 북한 관련 내용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변화의 흐름을 읽는다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오스굿의 ‘평가적 주장문 분석’의 기본적 구조를 토대로 이를 재구성하여 태도목적어(북한)에 대한 공통의미어와 태도목적어가 주장하는 내용의 파악에 주력하였음을 밝힌

---

14) 냉전시기의 사회과 교과서는 정권을 정당화하고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했다. 이는 남한 교과서 뿐만 아니라 북한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 남한의 사회과 교과서가 점차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반면, 북한의 교과서는 아직도 변화의 흔적이 극히 미미하다. 우리나라 사회·도덕과에 해당하는 북한의 교과서에서 남한정부는 ‘남조선 괴뢰’로 국민에 대해서는 ‘인민’으로 지칭되고 있어 이중적 인식구조를 견지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지주, 자본가 놈들은 인민의 원수이다. 지난 날 우리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 오늘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고 미제의 개노릇을 하는 남조선의 반동분자들도 인민이 아니라 인민의 원수이다.”(김완선 외, 「공산주의도덕: 고등중학교5」(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p. 7) 또한, 정치적 좌파에 대해서는 ‘남조선혁명세력’(교육도서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6」(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p. 28.)이라 칭하며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념 교육은 공교육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며, 교과서는 정치·역사·사회구조적 체제의 제약을 받게 된다. 때문에 연구자는 과거의 북한에 대한 비방 자체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왔던 ‘환경’적 맥락과 결부하여 내용을 되돌아 보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상황(탈냉전·새로운 국제질서·민주주의 제도화·국가경제력 성장 등)에 비추었을 때 우리의 교과서가 통일을 준비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는 것이다.

다. 즉, 북한이해의 측면에서 사회과 교과서에서 어떤 사실(지식)과 어떤 가치(의미)를 주장(전달)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이와 같이 접근하는 것은 내용이 본질적으로 추구했던 메시지를 좀 더 깊이 파고 들고 면밀히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에서의 대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결부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북한 관련 내용분석에 있어 북한 이해의 영역을 통일부에서 발간한 <통일교육지침서><sup>15)</sup>에서의 내용 구분을 토대로 북한정권·군사외교·경제·교육문화·북한주민생활의 측면에 북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치철학의 측면과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북한 명칭을 준거로 삼았다.

그리하여 오스굿의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의 내용분석의 준거틀은 다음과 같다.

<표1-3> 내용분석의 준거틀

구분	설명적 어구 (explanative)	평가적 어구 (valuative)
목적	사실의 기술 / 정보의 전달	이미지/ 가치 전달
주요 표현 방법	일반적 진술 / 서술적 표현	비유적(figurative) 상징적(symbolical) 당위적 표현
영역		
정치철학	공산주의 이론·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	이에 대한 표현

15) 통일부통일교육원(2004), 위의 책, pp. 22-44.

<b>북한정권 (정치현상)</b>	북한 정권 및 정치 현상에 대한 내용	"
<b>군사·외교</b>	군사·외교적 측면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	"
<b>경 제</b>	경제 구조와 경제 상황에 관한 내용	"
<b>교육·문화</b>	북한의 교육 및 문화적 현상에 대한 내용	"
<b>북한주민 생활</b>	주민생활에 관련된 내용	"
<b>명칭</b>	<b>전체</b>	북한 전체에 대한 명칭
	<b>정권</b>	북한 정권에 대한 명칭
	<b>국민</b>	북한 국민에 대한 명칭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 과정과 분석결과의 해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 자신이 통일환경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일과 관련된 연구자의 가치와 태도가 자료의 수집에 개입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기관의

문서와 문헌들을 수집하고, 이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내용분석의 대상이 되는 교과서 선정의 타당성 문제이다.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제도 역시 변천을 거쳤다. 국정교과서 제도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교과서가 출판되었다. 사실상 모든 교과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sup>16)</sup>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교과서 선택의 문제가 연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자는 사회과학 영역별로 학자들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각 시기별로 분석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별 고른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셋째, 내용 분석에 있어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교과서의 태도와 대북 인식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연구자가 교과서에 갖고 있는 기존의 편견과 선입관이 개입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자료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교과서의 표현을 직접 인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교과서의 메시지를 분석하였다.

---

16) 교육법 제 155조 1항

## II.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분류한 반공교육·안보교육·평화통일교육 시기에서의 통일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환경은 우리의 통일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다각도로 고찰되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통일교육에 주는 의미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본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개하였다. 또한 통일환경의 고찰은 III장과 IV장에서 전개될 통일교육정책과 교과서에서의 내용분석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할 수 있다.

통일환경은 국제환경·국내환경·남북관계로 나누었으며, 특히 국제환경에서는 국제체제의 변화<sup>17)</sup>와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의 순으로 짚어보았다.

### 1. 반공 교육기의 통일환경

#### 1) 국제환경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중심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 동방의 공산주의 진영간의 이원화된 이념적 대립은 정치·경제<sup>18)</sup>·군사적

---

17)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의 국제질서체제는 미·소양극체제(~'50년대 중반)에서 미·소중심의 다극체제(~'80년대 후반), 그리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탈냉전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동구권의 몰락(1948-1989)까지가 냉전체제로 분류된다.

18) 1947년 미국이 그리스와 터키에 4억달러의 경제원조를 시작하고 유럽을 경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마셜계획을 수립하자, 소련은 동구권의 상호원조체제와 공동

제분야의 대결로 이어졌다.

현실주의<sup>19)</sup>적 시각에서 이 시기의 국제정치는 미·소 양국의 힘에 의해 국제평화가 보장되던 시기로서 단순한 미국과 소련간의 대결이 아닌,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두진영으로 나뉘어 대결하는 양상을 띠었다. 미국은 서방의 유럽국가들과 NATO를 결성하고, 동북아에서는 한국·일본 등과 군사동맹을 맺었으며,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중공과의 동맹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양극체제에 균열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56년으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폴란드·헝가리의 봉기·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의·중소분쟁·인도네시아의 소련권 이탈 등 소련 지배권에 대한 도전현상이 공산권 내에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서방진영 내에서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의 핵무기 단독 개발 정책, 대중공 접근정책, NATO 철수, 서독의 동방정책에 의한 대동구접촉 등 서구제국이 미국의 지도권에서 벗어나 독자적 노선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

방위를 목적으로 한 몰로토프 계획을 진행한다. 이어서, 코민포름(Communist Information Bureau)을 통해 소련의 명령적 지배권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1948년 소련의 베를린 봉쇄로 냉전은 극에 달했고, 미국 주도하의 NATO 결성과 같은해인 1949년 공산진영 내의 경제정책과 기술상호원조를 위한 코메콘을 설립하였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양 진영간의 대립 속에서 세계 시장은 별개의 두 개의 시장으로 양분되었다.

19) 카(E.H.Carr)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국제기구나 국제도덕에 대한 믿음을 ‘유토피아주의’(Utopianism)로 비판하면서, 객관적인 국제정치의 현상에서는 힘(power)이 중심이 되며,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러한 현실주의 시각에 대해 철학적·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모겐소(Hans J. Morgenthau)로서 그의 「국제정치」(Politics among Nations)는 이후 현실주의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제정치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서울대학교정치학과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서울: 박영사, 2002, pp. 361-362.)

더불어 제3세계 비동맹국의 등장과 그들의 민족주의 사상은 국제정치 체제의 다극화 경향을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다극화 경향은 아직도 군사전략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소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것이었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한 국제적 안정 역시 미·소간의 균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미·소 양극체제는 붕괴되고 서구·중국·일본·제3세계 등이 하나의 독립된 세력을 형성해 나갔지만, 여전히 양극구조 하에서의 제한적인 것일 뿐이었다.<sup>20)</sup>

냉전시기 미국의 외교 노선 기본 방향은 ‘공산주의 원천 봉쇄’였다.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간의 동맹을 확대하면서, 소련을 정점으로 한 공산국가들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시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세계전략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남한에 있어선 정치적 지원<sup>21)</sup> 및 적극적 경제 원조를 통해

20)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서울: 법문사, 2002), pp. 95-105.

21) 우리 정치사의 굴곡 뒤에는 항상 미국의 선택이 있었다. 미국의 루스벨트는 일본의 침투를 막아달라는 고종의 청원을 무시했다. 이러한 루스벨트의 한국에 대한 역사적 배신은 그 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신탁통치 제안, 미군정의 친일과 등용, 정전협상의 조인, 5·16 쿠데타의 묵인, 12·12전두환 쿠데타의 용인, 1980년 광주학살의 묵인,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전두환 승인, 1993년 북한의 NPT탈퇴로 핵무기가 불거지자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동의없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한 일, 그리고 최근에는 합리적인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한국 국민의 정서를 경시한 일 등으로 이어진다.(이상민,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 (내일을 여는)역사 제5호, (서해문집,2004), p. 4 : 해방이후 한국 정치에 작용한 미국의 ‘보이지 않던’ 영향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선우학원, 최옥자 역, 「한·미 관계 50년사 :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일월서각, 1997)을 참고할 것.) 전후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 한국이 오늘날 인상적인 경제도약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데에는 미국 측의 지원이 한몫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반공산주의를 모토로 군림한 한국의 군사독재를 지원했으며, 이들 정권이 국민들을 괴롭히거나 학살할 때도 모르는 체 외면하거나 막후에서 도움을 주기도 한 것이다.(Eric Frey, *Schwarzbuch USA*, (Frankfurt: Eichborn, 2004), 추기옥 역, 「정복의 역사, USA」(서울: 들녘, 2004), p. 6) 이러한 미국의 역사적 선택은 우리의 미국 인식에 있어 혈맹이자 우방인 동시에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함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유지·확대해 왔으며 군사적으로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 한반도 유사시 인계철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을 배치하였다.<sup>22)</sup> 북한에겐 정치적 목적이 부합된 경제 제재조치를 단행했으며, 도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억지태세를 유지하였다. 이 기간에는 사실상 주목할 만한 북·미 관계나 남북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한·미관계만 존재하였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미의존(對美依存)·반공산권(反共產圈)·경제중심주의 외교를 펼쳤다.<sup>23)</sup> 이에 박정희 정권때의 국교 수립이후 한·일 관계는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과 1974년 문세광 사건 때 일시적 갈등을 제외하고 대체로 순조로웠다.

냉전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철저하게 남북한 차별정책,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남한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1949

---

일련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미국의 관심사는 정치적 성숙과 경제적 발전에 따른 '한국의 국력 강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자생적 안정성 확보'라기 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통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 혹은 유지와 '국가 이익의 보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한정책의 기본방향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결부된다.

22) 1953년 7월 23일 휴전협상이 조인된 후 북한의 도발방지를 위해 그 해 10월 1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듬해 1월 양국 의회의 비준으로 공식적인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수립되었다. 이후, 아시아 안보문제의 아시아화를 내세운 닉슨 독트린에 의해 1971년 3월 주한미군 1개 사단이 철수하였으며 카터 행정부 하인 1978년 추가로 3만 6천명이 철수하였다. 1989년 3월 부시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 의회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90년도 초반부터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따라 1992년 12월에 7천명의 병력이 철수한 것을 끝으로 하여 미 정부는 1992년 5월에 발표된 EASI II에서 93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2단계 이후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보류키로 결정하였다. 현재 1개보병사단을 포함한 미 제8군과 2개 전투비행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 제7공군을 기본 전투력으로 하는 3만 7천 명에 이르는 주한미군이 여전히 대북한 억지 역할을 하고 있다.(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참조.)

23) 이창현·김태운, 「신국제질서와 남북한」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p. 81.

년 사회주의 신중국을 건국한 이후부터 1980년 초까지도 중국은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촉이나 교류를 원치 않았다. 한국은 자본주의 진영의 동아시아 침병(尖兵)으로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 기보다는 ‘공산화’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안전과 사회주의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이후 1960년대까지 북한을 ‘미제국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로써, 그리고 완충지대로써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지를 보내면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sup>24)</sup>

그러나 1970년대 말 등소평의 개혁·개방이 추진되면서 외교정책의 기초변화를 가져왔고, 동유럽권의 붕괴가 시작된 '8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sup>25)</sup> 경제교류로부터 파생된 급속한 한·중관계의 진전은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로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으나, 중국의 국내정치가 안정을 찾고 경제문제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편 1960년부터 1980년대 전반의 고르바초프의 통치 초기를 포함한 시기에 소련의 지도부는 ‘북한·소련의 군사 조약’(1961)과 ‘미국, 일본, 남한간 군사동맹’과의 관계를 서로 균등한 세력의 징후로 보고 군사블럭을 중요시하였다.<sup>26)</sup>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로 서울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자 소련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급격히 중단되었다. 북한으로서는 1980년대 말 중·소 관계 개선으로 러시

24) 이원중, 「새로운 중국과 한국: 한·중관계의 역동성을 위하여」 (서울 : 나남출판, 2002) p. 183.

25) 오수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통일전략회 편, 「국제정세변화와 통일전략」 (서울: 신지서원, 2002), pp. 223-224.

26) 최태강, 「러시아와 동북아: 1990년대초 이후 러시아의 대중·일·한·북 외교」 (서울: 오름, 1994), p. 215.

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소련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대한(對韓) 외교정책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공 교육기’의 국제환경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매우 단순하고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 역시 이러한 국제체제의 영향 하에서 진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국제환경에 테프트의 기운이 돌고 한국 정부 역시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지만,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반공교육기의 양극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미국중심의 자유진영에 속해있던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모순을 비판하는 교육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국제환경에서 초강대국간 양극화 대결은 통일교육에서 적대적 대결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풍토를 만들어냈다.

## 2) 국내 환경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반공교육기의 정권변동은 ‘권위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sup>27)</sup> 분단모순과 미국이라는 외부적 제약을 안고 출범한 이승만 정권은 대내외적 정책결정 과정과 선택에서 많은 부분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승만 정권은 대내외 정책에서 강한 반공논리를 그 이념적 기초로 하였으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

27) 최선욱(2004), 위의 글, p. 106.

강력한 권위주의적 정치구조를 형성하였다.

정부조직이나 관료집단의 제도화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승만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사회세력 역시 아직은 사회화나 조직화의 수준에서 매우 취약하여 오히려 자신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분극화시켰으며 극우·극좌의 대립구조를 만들어냈다. 민족주의 세력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채 이승만의 정치권력과 미국의 지지를 배경으로 극우세력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였으며 극좌세력은 소련과 북한의 후원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갔다. 따라서 여론의 합리적 수렴과정과 이를 통한 대외정책 선택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제2공화국은 합법적 정통성에도 불구하고 정권 자체의 유약성과 정치적 부담을 안고 출범하였다. 사회구조는 진보적 세력층에 의해 분화되어 갔으며 정치권력의 응집력은 약화현상을 보였다. 4·19혁명 이후 사회일단에서 주체적 외교노선이나 당위적 통일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진보세력의 이상론적 자주 통일외교정책 논리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국민적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sup>28)</sup> 그리하여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권은 지도자의 정치적 리더십 결여와 사회 통합 능력의 무능 속에서,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어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을 최우선화 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를 메우려 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삼권분립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박정희 통치기반 강화와 혁명세력을 축으로 한 권력구조를 확립해 갔다. 이를 위한 이념적 기반은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북

---

28) 김성주, “한국외교정책의 국내외적 결정구조”, 장을병 외,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pp. 272-276 참조.

한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북한을 앞서야 한다는 박정희의 신념에 따라 ‘선경제 후통일’의 논리를 폈다.<sup>29)</sup> 이에 따라 남북한은 ‘체제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대결구도로 전환되었다. 반공교육은 더욱 공격성을 띄게 되었고 폐쇄적이며 감정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시기 사회의 반체제·반정부 세력들의 저항은 과거와 다르게 조직력과 응집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는 정책반영의 조그마한 몫을 차지했을 뿐 주요 정책은 권력핵심층을 중심으로 결정되었으며 여론화 작업은 정치적 조작을 통해 이루어졌다.<sup>30)</sup>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증진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965년 일본과 정식국교관계를 수립했다.<sup>31)</sup> 이어, 1970년대 국제적 긴장완화 속에서 3선 개헌 파동 등으로 국내정치가 불안해지고, 석유파동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미·일 편중외교에서 벗어난 비적성공산권에도 접근하는 실리외교를 전개코자 하였다. 그러나, 냉전에 균열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가지는 한계를 무마하기 위해 유신체제를 통해 독재를 더욱 강화했으며, ‘반공의식’은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1980년 10·26 사태, 12·12 신부 쿠데타 등 강압적 방법에 의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정통성과 합법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치명적 약점은 ‘강압과 독재’라는 기존 정권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반공의 논리’는 정치적 안정성 확보를

29) 외무부, 「한국외교 30년」(서울: 외무부, 1979), pp. 89-90.

30) 김성주(2004), 위의 글, p. 281.

31) 1965년 6월 22일 한·일 관계 정상화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같은해 12월 8일 관계 조약 및 협정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정식국교관계를 수립했다.(외무부, 「한국외교 40년」, 1990, p. 32)

위해 또다시 도구화되었다. 법적·제도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혁신세력의 연대가 활성화되고 반미·반제국주의 자주외교와 통일의 당위성이 사회 각층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진보세력과 대학생 등 사회세력에 의해 제기된 개혁 대안들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32)</sup> 1980년대 후반부터 절차적 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성립되어 남한체제에서 사회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데올로기 갈등은 사회전반으로 표출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라는 외부세력을 배경으로 집권한 이승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반공교육을 강조하였고, 독재와 권위주의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데는 실패하고 ‘반공’의 이념만을 남겼다.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집권한 박정희정권 역시 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반공교육을 강화했으며, 전두환 정권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안보’를 내세워 사회통제와 정치적 탄압의 구실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은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사고를 배제하는 경직된 통일교육으로 이어졌다.

### 3) 남북관계

남북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함께 통일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체제 자체로부터의 적대성과 이러한 적대성을 지지하는 외국군대의 존재로 인해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했다. 결국 남북한은 공히 한반도가 유일의 민족적·국가적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흡수통일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1949년 미군철수와 함께 외국

---

32) 이상우, 「함께사는 통일」(서울: 나남, 1993), p. 140.

군대가 모두 한반도를 떠나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한민족의 손에 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1950년 6·25전쟁을 일으켰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하고,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도 거부했다. 협상 자체가 ‘북한 괴뢰 정권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up>33)</sup>

6·25전쟁은 남북한 2국가 현상을 고착화하였고, 양측은 내부체제 정비에 돌입했다. 남북관계의 적대성은 국내정치에 있어서 지배강화로 이어졌다. 북한은 남로당을 포함한 일련의 숙청작업과 함께 1960년대 ‘유일체제’를 확립했다. 남한정부 역시 간첩단 사건 등으로 진보세력을 제거했으며 좌파적 이념이나 논의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였다. 사회·문화교류에 있어서도 1960년대까지는 냉전체제의 고착화라는 상황 하에서 매우 제한된 형태의 문제제기 혹은 정치적인 선전의 장에 머물렀다. 또한 국력에 앞서 있었던 북한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구하였다.<sup>34)</sup>

남북관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국제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데탕트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남한은 북한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평화통일구상선언”(1970)으로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는 7차에 걸친 적십자 회담이 이루어졌으나, 1972년에는 분단이래 최초의 남북합의문서인 ‘7·4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을 시작한다. 1973년

---

33)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서울: 돌베개, 2001), p. 29.

34) 이우영, “공존을 위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한국정치학회(편), 「21세기 남북관계론」(서울:법문사, 2000). p. 364.

남한정부가 발표한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과 북한의 ‘조국통일 5대 강령’은 이후 연합과 연방이라는 통일의 방법을 놓고 벌이는 긴 줄다리기의 시작이었다. 더구나 1970년대 중반, 베트남의 공산화가 확실시되고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사건, 판문점 도끼 사건 등이 발발함으로써 남북관계에는 긴장이 고조된다.

1982년 전두환 정권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골격은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 통일헌법에 의해 총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자유’ 등의 이념을 포함한 이 방안은 북한으로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역시 ‘주한미군 철수’ 등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었으므로 양측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1983년 10월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으로 남북 관계는 다시 긴장국면을 맞이하였고, 1984년 남한수재에 대해 북한이 지원을 제의하고 남한 정부가 이를 수락하면서 열린 적십자 회담 전까지 일체의 교류가 단절되었다. 정치적으로 대립과 경쟁, 갈등과 긴장을 벗어나지 못했던 1980년대에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상호교환(1985)’ 등 사회문화 교류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들 교류 역시 정치적 영향 아래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요약하면 외부세력에 의해 분단된 남한과 북한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체제의 이질성을 고착화시켰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국제적 데탕트 속에서 독자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자의적인

필요가 아닌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과 경쟁, 갈등을 반복하는 가운데 형식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남한 내부에 북한에 대한 적대심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따라서 당시의 반공교육은 적대적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유지를 통해 정당화되었다.

## 2. 안보 교육기의 통일 환경

### 1) 국제 환경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행된 1970년대 1980년대 중반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던 미·소간의 이념·정치·군사적 대치구도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0년 소련 연방이 해체함으로써 1990년대부터는 완전히 와해되어 국제질서는 급격히 재편되었다. 냉전 이후 국제체제에 대해 미국중심의 단극체제(unipolar system)라는 견해와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라는 상반된 견해<sup>35)</sup>가 교차해 왔으나,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인다. 이제

35) 나이는 탈냉전 후의 국제체제를 하나의 체제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다층구조로 설명했다.(Nye, Joseph S,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71/2), 1991, p. 88.) 헌팅턴은 단극적 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로서 미국을 정점으로 한 일본과 EU 등 다른 축들이 새로 등장하는 체제라고 주장했다.(Huntington, Samuel P,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 *World Politics*, 25(April), 1991, pp. 3-17.) 한편, 울포스는 현국제체제가 완전히 미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 지속성을 역설하고 있다.(Wohlforth, William C,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21/1(Summer) 1999, p. 41)(조순구(2002), 앞의 책, pp. 101-102에서 재인용)

세계는 탈이념, 경제제일주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세계질서의 다원화 등을 특징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탈냉전의 시기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종식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이후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개입과 확대’를 통한 자국의 국익 보호와 작은 비용으로의 ‘균형자 역할의 수행’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체제 유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 확대, 북한과의 관계개선 등을 도모하면서 냉전 이후 확보된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바탕으로 역내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려 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 심화와 전략적 대립의 딜레마 속에서 일본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통한 중국견제, 동북아에서의 안보비용 절감, 그리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 등을 도모해 왔다.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1965) 이후 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1990년대 들어와 한·소 수교 한·중 무역대표부 설치 등 남한의 북방정책과 북·미 접근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북한으로서도 일본의 자금을 얻어 경제난국을 풀어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7차례에 걸친 수교 회담이 성립되었다.<sup>36)</sup> 비록 양측의 입장 차이로 대화가 실질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sup>37)</sup> 하더라도 양자의 만남 자체는 해빙의 국제기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기 중국과 한국은 발빠른 관계의 개선을 이루고 있었다. 1989

---

36) 김강녕, “일·북한 관계개선 전망과 남북한 관계”, 「통일문제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92), p. 261.

37)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웠고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는 대화의 실질적 성과를 보지 못한 채 담보 상태를 계속하였다.

년 천안문 사태로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지만,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수교의정서(修交議定書)를 교환하고 ‘선린우호(善隣友好)협력관계’를 약속하는 정식수교<sup>38)</sup>를 이루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남한에 대해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정치관계 증진을 점진적으로 도모한다는 기본 전략을 취해 왔다.

한편 러시아의 1988년 서울 올림픽 참여는 한소 관계 정상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 12월 말 “모스크바 선언”으로 알려진 “한소관계의 공동원칙에 관한 선언”은 냉전의 종식과 양국관계의 새로운 장을 의미하였고, 경제협력 강화라는 러시아의 목표와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한국의 목표가 갈려있었다. 1991년 8월 보수세력의 쿠데타와 소련 붕괴는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대러 외교관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였다. 1992년 엘친 러시아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 KAL기 사고에 대한 사과성명을 포함한 ‘한·러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한국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북한은 국제핵에너지기구(IAEA)의 탈퇴선언 외에 1993년 중거리 미사일 “노동1호”의 시험발사를 시작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안보교육기의 외부환경은 국제질서의 새로운 재편 속에서 미·일은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중·소 역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남한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제도화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반공 일변도의 적대적 통일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비록 형식적으로나마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

---

38) 이에 앞선 1991년 12월 ‘민간협정’(92. 2. 1발효, 이후 무역협정으로 승격/ 92. 10. 30 발효)이 체결되었다.(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의지 함양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요인들로 작용하였다.

## 2) 국내환경

안보교육기에는 노태우 정권 중·후반과 김영삼 정권이 포함된다.

6·29선언을 통해 경직된 정국을 돌파하고 출범한 제6공화국의 정치질서는 외형상에 있어서는 민주지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대통령 직선제, 30년만의 지방자치제 부활, 언론의 자율성 신장, 노동운동의 활성화<sup>39)</sup> 등은 이러한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전두환 정권에 두고 있었으므로 전정권에 대한 국민적 감정의 해소, 정치적 안정,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조응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고 내적 정치구조는 전정권과 비교하여 취약했다.

정책결정 엘리트들은 이러한 난국의 타개책으로 북방외교를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보수대연합(민정·민주·공화)에 따른 정치권력의 분배구조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내외 정책과정형성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였다. 노태우 정권 하에서 사회세력의 신장은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6·10시민항쟁’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사회세력은 과거와는 달리 구체적인 대내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정책투쟁을 벌였다. 이는 통일정책이나 부동산, 물가 등 경제정책에서 두드러졌다. 시민세력은 보수대연합에 대응하여 개혁정치를 요구하고 대외·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노태우 정권은 이를 어떠한 형태로든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해야 했다.<sup>40)</sup>

39) 이남영,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성격과 리더십”, 김호진(편), 「한국현대정치사」(서울: 법문사, 1995), p. 328.

40) 김승주(1994), 앞의 글, pp. 288-289.

노태우 정권에 이어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국민의 직선제 이후 첫 민간인 출신의 정치엘리트로서 성장 과정에서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놓고 군부세력과의 대립 속에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여 정권을 창출한 것이 특징이다.<sup>41)</sup> 진향적인 대북정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정권의 정통성 시비와 맹목적인 냉전, 반공의식에 젖어있던 극우세력의 도전,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국내정치 게임화 현상은 냉전의 해체와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단 해소되었다. 더욱이 이시기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정권수립 이후 최악의 경제난으로 인해 체제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김영삼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임을 강조함으로써 현실적 차원에서 대북 및 통일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정치상황이 불리해졌을 때는 여전히 대북 및 통일정책이 국내정치에 이용되었다.<sup>42)</sup> 이렇게 정책적 혼선의 원인인 북한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은 정치엘리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표출되었다. 북한의 NPT탈퇴선언<sup>43)</sup>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고착화시켰다.

정리하면, 1992년부터 1997년에 이르는 반공교육기간 동안 국내정권은 통일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국제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을 정리하지 못한 채 감상적이고 당위적인 측면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혼선에도 불구하고 이시기의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41) 노중선,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서울: 사계절, 1996), pp. 474-479.

42) 최완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반성과 제언”, 백영철 외(2000), 앞의 책, pp. 37-42.

43) 1993년 3월 12일

부추기는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폐기되고 통일에 대비한 교육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반공교육기의 대결과 경쟁 위주의 통일교육과 대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 3) 남북관계

이 시기 남북관계의 특징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경제력 확보에 기인한 남한의 '적극성'과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국에 기인한 북한의 '방어성'으로 대별된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명확한 단계를 부여한 '3단계3기조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1980년 통일방안 이후 새로운 종합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과거의 통일방안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였다.

1990년대 들어 남북한은 냉전 말기 남북관계를 특징짓던 주체의 분산성과 정치적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 신질서 협상에 나섰다. 1989년 예비회담을 시작한 양측은 1990년 남북 고위급 본회담을 성사시켰다.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1991)이 채택되었다. 기본합의서가 실천단계에 진입할 즈음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관계는 다시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고, 1992년 12월에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9차 본회담 및 공동위원회 회의가 팀스피리트 훈련 등의 이유로 북한에 의해 취소되었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직접협상(1993)으로 나아갔으나, 그해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대북한 핵사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1994년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일단락된 북한 핵문제는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은 일정없이 연기되었다.

1995년 북한의 가중된 식량난으로 인한 국제적 구조 요청에 따라 정부는 쌀지원을 성사시켰지만, 인공기 계양 사건, 사진촬영 사건과 남한 내 상대적 빈곤층 등의 반발 등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19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서는 북한의 쌀 부족이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견지했다. 한편 북한은 1995년말 경수로 공급협정에 합의하는 등 체네바합의 일정을 대체로 이행하면서도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정전협정 무력화의 수위를 높여 나갔다.<sup>44)</sup>

다만,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비교적 다양한 사회문화교류가 실현되었다.

1988년 “모든 부문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는 남한 정부의 ‘7·7선언’으로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기 시작했고, 1989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마련되고 동년 3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그러나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 방북과 이들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형선고와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북한 정부의 비난 등 일련의 과정은 남북간의 사회문화 교류 협력이 민감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사안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up>45)</sup> 역시 범국민 차원으로 확대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안보 교육기의 남북한 관계는 매우ダイナミック하게 전개되었다. 남한의 적극적인 정책과 북한의 방어적인 정책이 교차하면서, 남북고위급 회담

---

44) 권막학,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신대북 정책”, 윤정석 외, 「통일환경론」(서울: 오름, 1996), pp.215-221.

45)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10.

에서 소정의 합의문이 도출되는 등 남북한은 해빙을 맞이하는 듯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불거진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황은 남북한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식량난까지 가중된 북한은 더욱 방어적이 되었다. 북한의 정치적 고립과 경제난의 상황은 민족적 연민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으나, 남한측의 입장에서는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통일교육에도 반영되어 민족동질성 회복이 강조되면서 통일에 대한 대비로서의 교육이 시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실상 전달이 남한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 3. 평화통일 교육기의 통일환경

#### 1) 국제환경

평화통일교육기의 국제환경은 클린턴 정부 말기부터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시기이다.

99년을 포함해 21세기 초반 평화통일교육기의 동북아 질서는 미국의 '단극체제' 추구와 이에 맞서려는 중국 일본의 '다극화 체제'로의 재편 노력으로 요약된다.

부시 행정부 출범(2001.1) 이후의 미국은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등 미국 주도의 일방주의를 지속해 가고 있다. 특히 9·11사태 이후에는 국제 테러리즘 및 대량 살상무기(WMD)

위협 및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체화했다.

핵문제와 관련한 북·미 갈등 역시 9·11 사태 이후 더욱 극명해져서 북한정권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반테러전에 있어 북한은 강력한 타겟이 되고 있다. 2002년 10월 미 국무부 켈리 차관보 방북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UE)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부터의 2차 핵위기는 한반도에 강력한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 정책<sup>46)</sup>을 바꾸지 않는 한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고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북·미 갈등의 정치적 관계는 당분간 해결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sup>47)</sup>

북핵(北核)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일국 방장관은 ‘북이 공격시 즉각 응징 하겠다’<sup>48)</sup>는 발언을 해 대전후 최대의 군사강경론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일본의 일반 국민들 역시 북한을 최대의 공적(公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 영공을 가로지르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대포동미사일 시험 발사, 1998. 8. 31)한 바 있으

---

46) 2002년 9월 20일 부시정부가 공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1945년부터 추구 해온 다자동맹과 집단방위를 통한 위협과 저지 전략에서 탈피하여,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적에 대한 예방 전쟁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방전쟁은 정치적 긴장을 통제할 수 없는 분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Eric Frey, 추기욱 역(2004), 앞의 책, p. 557.) 으로 미국에 의해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반도에서의 실제 대재앙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7) 통일부통일교육원(2004), 「통일문제 이해」(서울: 통일부, 2004), pp. 26-30 참조. 2005년 2월 14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외교장관의 회동에서 미국의 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때 북한은 1-2개월 정도 관망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이에 따라 3~4월 이후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전망이 제기(동아일보. 2005. 2. 15)됐으나 2005년 5월 현재 6자 회담의 재개 가능성은 아직도 담보 상태이다.

48) “We’ll attack, Japan tells North Korea”, The Age, 2003. 2.15(<http://www.newszon.com>)

며, 남파간첩들에게 일본어와 일본관습을 가르칠 목적으로 10여명의 민간인을 강제납치 했다고 시인(2002. 9. 17)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일(日)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즉, 북한의 맞상대는 워싱턴일지 모르나 자국은 훨씬 가까운 공격목표로 인식되면서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북한은 악마”<sup>49)</sup>라고 표현될 정도로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일본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최근 미국과 일본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 대량살상무기(WMD)확산문제, 인권문제 등에서 갈등하고 있다.<sup>50)</sup> 중국은 이미 영토문제<sup>51)</sup>로 일본과 갈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과거사 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우경화 경향에 따라 남·북한과 함께 일본과 심리적 대치상태<sup>52)</sup>에 있다.

중국은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방위 외교(omnidirectional diplomacy)를 추진하고 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기존의

---

49) 동아일보, 2005. 5. 31.

50) 지난 2005년 4월 23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고이즈미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의 개선과 대화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사 문제와 동중국해 가스전 갈등, 중국의 ‘반일감정’과 일본의 ‘반중기운’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양국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다는 지적이다.(한겨레, 2005. 4. 24.)

51) 일본과 중국은 북방 4개섬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52) 한·중·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묻는 여론 조사에서 한국인의 63%와 중국인의 64%가 ‘일본이 싫다’고 답해 지난 20년 이래(1984년 이후) 최고의 기록을 보였다.(동아일보, 2005. 4. 26)

비대칭적 특혜구조에서 벗어나 호혜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53)</sup>

엘친에 이어 집권한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의 근간은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이다. 최근 러시아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남북한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익을 추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복원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이 현재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sup>54)</sup>

평화통일교육기의 국제환경 특징은 강력한 미국의 ‘힘’에 의한 외교와, 일본과 중국의 군사대국화 추구하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폐쇄적 사회구조를 견지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계속되는 핵갈등은 한반도의 정치환경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강경일변도의 미국 대외정책과 국제사회에서 보여지는 북한의 ‘일방주의’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더욱 어렵게 하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불안한 대외 흐름은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 혼란<sup>55)</sup>, 남남갈등 등 통일교육에 혼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중국과 일본의 대국화경향 속에서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53) 이원중(2002), 앞의 책, pp. 196-197참조.

54) 통일부통일교육원(2004), 앞의 책, p. 42.

55)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의 국민들의 대북 화해 무드와, 북한측의 불바다 발언, 조문파동, 잠수함 침투 사건시 표출되었던 대북적개심은 너무나 상반되었다.

## 2) 국내환경

김대중 정부의 출범(1998.2)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알려진 외환금융위기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출범하였다. 일반국민들은 악화된 국가경제 속에서 가중된 생활난을 겪어야 했다.

정치적으로는 호남권과 수도권을 지지기반으로 삼으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국민회의와 충청권을 지지기반으로 삼으면서 상류층과 대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보수 정당인 자민련과의 연립은 애초부터 이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난국 속에서 김대중 정부는 IMF를 2년만에 조기졸업하고 철차적 민주주의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56)</sup>

통일정책 측면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한 내의 사회갈등, 이념 갈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 당시 여론조사 분석 결과 국민의 2/3가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지지층과 반대층을 분석하여 보면 햇볕정책에 대해서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부류·호남지역 출신·연령이 낮을수록 지지가 높았으며 반대로 보수적일수록·영남지역출신·연령이 높을수록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가 높았다. 이렇게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반공주의와 지역주의가 맞물리면서 남남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57)</sup>

56) 김일영, “국민의 정부의 정체성: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이의 기로선 김대중 모델”, 23회 학술회의 「새천년을 위한 한국사회의 비전」 주제발표자료(1999.10.18), p. 2 참조.

57) 김용복,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계 성찰과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경남정치학회(공편),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쟁점과 대안 모색」, 통일연구회 제16차 정책포럼 경남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주제발표문,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2), pp. 24-25 참조 : 남남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주적규정 논란’이다. 주적 규정문제는 군사안보전략의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입장과 남북화해 시대에 적절치 시대착오적 자세라

‘참여 정부’, ‘토론정부’라는 수식어로 등장한 노무현 정부는 공식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정책 지향과 성격을 함께 하고 있고 지지기반 또한 같다. 현재 노무현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대외적으로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역할의 모색이고 대내적으로는 가중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모색이다. 민주주의 측면에 있어선 과거 어느 정권보다 활발한 시민운동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에 민주주의가 성숙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평화통일교육기의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화는 통일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 정부주도의 일방적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벗어나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학교통일교육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세대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및 통일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므로 혼란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북한의 객관적 이해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3) 남북관계

햇볕정책이라고 불리우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평화와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여 3대 원칙인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흡수통일배제·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을 기본골격으로 진행되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의 남북관계의 전개를 보면 첫째, 김대중정부 초기부터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모색기

---

는 입장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다.

(1998.2-2000.6)로 이 시기에는 정부 간의 관계보다는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서 진행된 민간차원의 교류가 남북화해의 기반을 조성했다.<sup>58)</sup> 둘째,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부시 정권의 출범 초까지 기간(2000.6-2001.2)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북·미, 북·일 관계의 개선이 진전된 시기이다.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열은 사건이었다.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진전되어 네차례의 장관급 회담<sup>59)</sup>·세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sup>60)</sup>과 세차례의 이산가족 상봉<sup>61)</sup>·제1차(12.27-20)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1차(9.25-26)국방장관회담과 다섯차례의 군사실무회담<sup>62)</sup> 등이 열렸다. 매우 숨가쁘게 남북관계가 진전되었으며 성과도 기대되었다.

셋째,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임동원 특사의 방북이전까지의 기간(2001.2-2002.4)으로 북미관계의 경색에 따른 남북관계의 교착이 지속된 시기이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9.11테러로 말미암은 미국의 강경노선은 남북관계 역시 교착으로 빠뜨렸다. 결국 남북관계를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한 사건은 남북정상회담이었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한 것은 북미관계의 악화였다.<sup>63)</sup>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의 화해·협력 기조를 승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 있어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강력한 걸림돌로 작용

58) 현대 정주영 회장의 방북과 금강산 관광의 시작(1998.11) 등으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서해교전, 잠수함침투 사건 등으로 정치 군사적 충돌이 있었음에도 일관되게 경제협력을 추진한 시기이다.

59) 1차(서울): 2000.7.29-31, 2차(평양): 8.29-9.1, 3차(제주)9.27-30, 4차(평양): 12.12-16.

60) 1차: 2000.6.27-30, 2차: 2000.9.20-23, 3차: 2001.1.29-31

61) 1차: 2000.8.15-18, 2차: 2000.11.30-12.2, 3차: 2001.2.26-28

62) 1차: 2000.11.28, 2차: 2000.12.5, 3차: 2000.12.21, 4차: 5차: 2001.2.8

63) 김용복(2002), 위의 글, pp. 10-12 참조.

하고 있다. 현정부의 북한핵에 대한 기본입장은 북한핵 불용·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한국의 적극적 역할 등 북핵문제 해결 3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 있어 주목할 만한 남북관계는 2003년 4월 미국, 중국, 북한이 참가한 가운데 3자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를 기초로 2003년 8월 북경에서 남북한과 미·일·중·러시아가 참여하는 제1차 6자회담<sup>64)</sup>을 시작으로 총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제4차 6자 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두차례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04.5.26 금강산, 6.3-4 설악산)에서는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sup>65)</sup> 이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평화통일교육기의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1998년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평양공연과 윤이상 음악제의 개최,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 대회의 북한 참가와 7월 제주도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의 북한 참가, 같은해 8월 KBS 평양노래자랑 등이 관심을 모았고, '02, '03 두 차례에 걸쳐 '8.15남북공동행사'와 '개천절공동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04년에는 김일성 10주기 조문 불허 등의 이유로 '8.15 남북공동행사'를 거부하였고, '개천절공동행사' 역시 '현 정세에서는 남측 대표단을 평양 개천절 행사에 초청하기 어려울 것 같다' <sup>66)</sup>는 의사를

64) 1차: 2003.8.23-27, 2차: 2004.2.25-28, 3차: 2004.6.23-26

65) 통일부통일정책실,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05), pp. 21-26 참조.

표명해 역시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가 실제로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인식케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협력 추진”이라는 기조 하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sup>67)</sup> 이에 따라 인적 교류<sup>68)</sup>와 인도적 차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보건·의료, 농업개발, 위약계층지원 등 민간차원에서의 대북 지원<sup>69)</sup>도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교류는 남북한 간의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대체하고 갈등을 극복하여 통일을 향해 나아간다는 일차적 목표를 갖지만, 통일 이전의 평화적 공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평화통일교육기의 남북관계 환경은 김대중·노무현의 적극적 대북정책 기조가 활발한 사회문화적 교류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갈등 속에서도 북한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적극적 방향의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

66) 한겨레, 2004. 9. 30.

67) 통일부통일정책실(2004), 앞의 책, p. 184.

68) 국정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방북인원은 26,213명으로 전년의 15,280명에 비해 71.6%나 증가했다. 연도별 방북인원은 2002년 12,825명, 2001년 8,551명, 2000년 72,26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한겨레, 2005. 5. 3.) 반대로 북측 인원의 남한방문객은 2004년 321명, 2003년 1,023명, 2002년 1,052명으로 감소했으나, '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참가인원(668명)과 '03 대구하계U대회참가인원(524명)(통일부통일정책실(2004), 앞의 책, pp. 198-200.)을 고려했을 때 증가 추세로 파악할 수 있다.

69) 2003년 민간차원 대북 지원 금액은 총 7,061달러(847억원으로 95년 이후 대북 지원금액인 28,369만달러(3,448억원)의 1/4 수준이다.(통일부(2004), 위의 책, pp. 246-247.)

### Ⅲ.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1. 반공 교육기

반공 교육기는 미군정기 이후 제4차 교육과정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통일교육정책이 ‘방어적 반공’에서 ‘적대적 반공’으로 그리고 ‘대결·경쟁으로서의 반공’ 교육으로 성격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체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반공교육이 강조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1) 통일교육 정책

해방직후 미군정기에는 좌우익의 대립이 심각할 정도였으나, 당국은 반공교육에 관해서는 명확한 방향 설정이나 목표 제시가 없이 소련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현상 유지에 그치는 소극적 방법을 택하였다. 결국 교육목표와 교육지침 수준에서 통일·반공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민주시민교육의 강조로 반공교육이 간접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경계나 주의 정도의 방어적 측면의 ‘반공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민주적 민족교육에 치중하였다.<sup>70)</sup>

반공이 정부나 국민의 현실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라

70) 군정청·문교부, 「초중등학교교수요목집」(군정청·문교부, 1946), 인터넷 문서(교육과정정보서비스, <http://www.kncis.or.kr>): 추병완,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452, 한국교육신문사, 1992.6, p. 173.

고 할 수 있다. 즉 전쟁으로 인해 반공이라는 안보 이데올로기가 효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정당성을 획득하였고 분단의식이 내면화되었으며 민족주의는 힘을 잃게 되었다.<sup>71)</sup> 한국전쟁 이후 몇해 동안은 멸공교육, 방일·반공교육이 문교시책으로 강력히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국가·사회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4월 19일 혁명에 의해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통일의 문제가 사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통일교육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듯 하였다. 하지만, 제2공화국은 주관성 있는 창의적 조국통일의 방안이 부재하였고 지적 호기심에 가득 찬 학생들의 요구와 통일 열망을 수용치 못한 상태에서 과거의 반공교육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sup>72)</sup>

1963년 2월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1963년~1974년)에서는 교육의 기본 목표를 민주주의교육에서 민족주의교육으로 전환하고 민족 주체성(자주성)<sup>73)</sup>과 국력배양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반공도덕교육을 강화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교과활동, 특별활동과 함께 반공·도덕 시간을

---

71) 이종태, 「분단시대의 학교교육2」(서울: 푸른나무, 1990), p. 107.

72) 선순철, “통일에 대한 인식 태도와 통일교육 개선방향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1990, p. 62 참조.

73) “해방 후의 교육이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발전해 오기는 했으나, 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민주적 공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여 왔기 때문에 …(중략)…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 형성하려고 하는 인간은 그렇게 막연하고도 보편적인 민주적 공민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서울: 문교부, 1963), 인터넷 문서: 교육과정정보서비스, <http://www.kncis.or.kr>)

특설하면서 학교교육에 반공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반공교육의 강조는 1968년 무장공비 침입사건과 함께 정부와 국민들의 국가안보 의식의 고조로 극대화되었으며, 연말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에도 반공이념이 하나의 교육이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공위주의 교육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분쇄해야 할 적대세력으로 간주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부정하였으며, 북한을 대화상대로서 인정하지 않은 결과 평화통일 논의 자체가 엄격하게 금기시되었고 오직 ‘선건설·후통일’의 원칙 아래 경제적 역량으로 국민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하였다.<sup>74)</sup>

1970년대 들어 탈냉전의 국제환경 변화와 함께 1972년 10월 유신은 교육의 내적인 개혁을 더욱 촉진시켜 1973년 8월 문교부령 제32호 교육과정의 개정을 공포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전의 비정규교과였던 반공·도덕 생활을 일원화하여 도덕과를 정규화하고 반공을 교과 내용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고등학교에서는 사회과의 일부였던 국민윤리를 정규 교과화하고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 시기에는 반공 강조의 일환으로 도덕·국민윤리 교과가 신설됨으로써 반공교육이 교과교육 내부로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다.<sup>75)</sup>

---

74) 한정도, “90년대 통일교육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p. 20.

75)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치들을 “민족 교육, 윤리 교육의 강화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교육의 강화와 사회과의 관계는 적지 않은 문제를 남겨 놓았다. 즉, 학문의 특성상 국사, 국민 윤리를 독립시키려는 게 아니고, 의식 교육-정치 교육-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할 때, 사회과의 관련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제3차 교육과정(1974~1981)의 특징은 종전의 교육과정에서는 반공통일과 멸공통일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해, 평화통일을 교육목표<sup>76)</sup>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계기로 하여 통일정책을 지도내용으로 추가했으며 반공생활 지도에서 공산주의 이론의 모순이 추가된 것도 새로운 사실이었다. 그러나 북한을 공산집단이라 규정하고 공산집단의 포악성을 폐망한 월남의 사례를 들어 한국전쟁 미경험 세대에 주입시킨 것이 현장교육의 실태<sup>77)</sup>였으며 당국은 정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반성과 지속적 개발을 등한시한 채 무조건 형식적 반공교육만을 강화시킴으로써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허구성을 비판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배양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1978년부터 교육과정의 개편작업에 착수하던 중 1980년대 들어 민주·복지·정의사회를 표방한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국가 지표에 따른 교육의 새방향 설정을 위하여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22호로 공포된 것이 제4차 교육과정이다. 제4차 교육과정(1981~1988)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민주사회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는 국민정신교육 강화’<sup>78)</sup>라는 취지에 따라 반공교육을 체계화하였고 공산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

---

교육과정 해설」(서울: 문교부, 1988), (인터넷문서, <http://www.kncis.or.kr>)

76)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목표에는 “우리는 조국 근대화를 조속히 성취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통일함으로써 민족 중흥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거족적으로 유신 과업을 추진하여야 할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다.(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77.)

77) 선순철(1990), 앞의 글, p. 66.

78) 문교부, 「중학생 새교육 과정 개요」, 1980. p. 6.

러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굳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sup>79)</sup>

또한, 북한을 대화와 대결의 상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제3차 교육과정기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sup>80)</sup>

## 2)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

1954년 공포된 제1차 교육과정(1954~1963년)의 ‘사회생활’과 아래에  
는 반공·방일교육을 담당하는 ‘도의교육’이 편제되어 있었다. 또한, 일  
반사회과 과정에는 민족주의·애국심 고취와 함께 ‘반공교육’이 국제질  
서의 시대적 요청에 따른 필수적인 교육 목표로 명시하고 있었다.<sup>81)</sup>  
그러나, 지도내용에 있어서는 <정치와 사회>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이  
데올로기의 이론적 비판 교육이 있었고, <경제와 사회> 및 <문화의  
창조>에서는 간접적으로 반공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경제와 사회>과목에서 사회보장과 사회 사업을 대  
단원으로 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갖춰졌던 당시의 시대적 배  
경을 고려할 때, 이 단원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적 제도의 장점을 강조하  
려 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79) 윤진영,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92 북한·통일연구논문집 (6)』, 통일원, 1992. p. 442.

80) 한정도(1990), 앞의 글, p. 29.

81) “오늘과 같이 민주, 공산 양진영이 필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는 반공 사상을 철저히 하며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우리 국민의 취할 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은 고등 학교 일반 사회에서 담당할 필요 불가결한 목표” : “국가 민족의 의의(意義)와 이상(理想)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독립 정신을 굳게 가지게 하고 애국 애족의 정신과 태도를 북돋운다.”, (문교부,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6호 별책, 1955), pp. 46-47.)

82) 문교부(1955), 위의 책, pp. 52-76.

<표3-1> 제1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영역 반공교육 관련 단위

내용<sup>82)</sup>

구 분	단원명	지도목표	지도내용
정치와 사회 (고1)	(13단원) 사상 문제	사상 문제란 무엇인가를 이해시키고 우리 나라 사상 문제의 현실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건전한 사상을 가지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우리 나라 사상 문제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산주의를 특히 배격하여야 할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경제와 사회 (고2)	(17단원) 사회 보장과 사회 산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사회 보장 제도와 공공 사업을 이해시켜 사회문제 해결에 협동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18단원) 경제 문제와 국제적 협동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국제적 협동이 필요함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경제 문제를 에워싼 올바른 국제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과 태도를 기른다.	·국제 간에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문화의 창조 (고3)	(4단원) 도덕	도덕이 무엇인가를 이해시켜 가치 기준으로서의 선과 아울러 정의의 개념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도덕 관념에 철저히 하여 도의를 실천하려는 의욕과 태도를 기른다.	·우리 나라 도덕의 현실은 어떠하며 그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제 2 공화국 정부의 반공 교육의 강화 정책은 일반사회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반 사회>에 ‘공산주의 비판’ 단원이 신설되고 <정치경제>의 1 단원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비판’ 이라

는 주제가 들어가게 되었다. 이 단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멸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제2차 교육과정에 추가된 반공교육의 일반 목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표3-2> 2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반공교육 관련 단원 내용**

과목명	단원명	지도내용
(고등학교) 일반사회	(2단원) 공산주의의 비판	① 공산주의의 주장 ② 공산주의와 독재 정치 ③ 공산주의의 정치와 경제 ④ 공산주의의 사회와 문화 ⑤ 공산주의의 세계 적화 정책 ⑥ 승공 이념의 확립

1972년 10월 유신이 일어난 2년 후인 1974년 개정된 제3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종전의 일반 사회가 없어지고 ‘정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두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교육 내용은 한국적인 것, 우리만의 특수한 것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 <정치경제>와 <사회 문화>의 첫 단원에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 중흥’, ‘우리나라의 현실과 민족의 진로’라는 단원이 각각의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처한 분단적 특수 상황을 강조하여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공교육이 도덕과 및 국민윤리 교과로 분리됨으로써 사회과 교육과정의 외형적인 내용체계에서는 직접적인 반공 교육 단원이 빠지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정치경제> 영역에서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는 주제가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체제대결

에 있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는 정권의 자신감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표3-3> 제3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영역 통일관련 내용<sup>83)</sup>

구분	목 표	내 용	특이점
정치 경제	<p>가. 우리 나라의 정치 형태와 특성을 이해시켜서, 우리 나라 민주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토착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p> <p>나. 법률의 기초 이론과 생활에 유용한 법률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법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서 건전한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p> <p>다. 경제의 기본 원리와 우리 나라 국민 경제의 특징을 이해시켜서, 경제 발전과 복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게 한다.</p>	<p>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민족 중흥</p> <p>나.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p> <p>다. 우리 나라의 헌법</p> <p>라. 국민과 법률 생활</p> <p>마. 국민 경제의 순환과 성장 : (10) 남북한의 경제 비교</p>	<p>경제 영역에서 '남북한의 경제 비교'</p> <p>독립된 통일 · 북한 관련 단원 없음</p>
사회 문화	<p>가.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서, 문화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한다.</p> <p>나. 인간의 사회와 과정을 이해시켜,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자기 형성 과제를 자각하게 하고, 건전한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p> <p>다. 근대화 과정의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를 이해시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p>	<p>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민족의 진로</p> <p>나. 우리의 사회와 문화</p> <p>다. 개인과 사회 생활</p> <p>라. 사회 변동과 근대화</p> <p>마. 국가의 발전 계획</p>	<p>직접적인 통일 · 북한 관련 단원 없음</p>

83) 문교부(1977), 앞의 글, '일반사회 교육과정' 참조

1973년의 교육과정에서 정치, 경제와 사회, 문화로 분과되었던 고등학교 공민 영역은 1981년에는 <사회Ⅰ>, <사회Ⅱ> 로 구분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의 목표와 특이점은 협동 등 공동체적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고 사회의 안정을 강조하는 목표가 강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교과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통일·북한 관련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도사항’<sup>84)</sup>에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민정신교육’<sup>85)</sup> 강화를 철저히 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통일이 정치적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표3-4> 제4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영역 통일관련 지도목표와 특이사항<sup>86)</sup>**

구분	지 도 목 표	통일교육 관련 특이사항
사회Ⅰ	1) 건전한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른다. 2)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 능력을 기른다. 4) 사회 현상을 바른 시각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 5) 합리적인 생활 자세·협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 직접적인 통일·북한 관련 단원 없음 · 지도사항에 ‘조국 통일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당면 과제를 확고히 인식하게 하여 국민정신교육에 충실을 기한다’라고 명시함
사회	1)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 직접적인 통일·북한 관련

84)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서울: 문교부, 1981)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추출하여 구성함.

85) 3, 4차 교육과정에는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가 나타나 국민정신교육과 국력의 집결을 강조하게 되었다.(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해설서」(서울: 교육부, 1998), p. 6.)

II	바탕으로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게 한다. 2) 인간의 사회와 과정의 이해를 통한 건전한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3) 근대화 과정의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를 이해시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당원 없음 · 지도상의 유의사항에 “국내외 정세에 관한 시사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되,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라 명시
----	--	---

반공 교육시기에 실시된 통일교육은 냉전과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를 반영하는 산물이었다. 미·소 양극화된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한국정부에게 ‘반공이데올로기의 강조’는 국제정치의 구조 아래서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하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띠게 되었고 국민의 지지 속에서 고착화·체계화될 수 있었다.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이 약한 군부정권은 반공교육을 체제안정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멸공·승공’이라는 명목 아래 대결과 경쟁을 조장하는 감정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미소대립 등 기존의 냉전체제에 균열이 일자, 통일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4차에서는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자, 대화와 타협의 동반자’라는 이중의 인식구조 아래서 통일교육에 접근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는 형식적으로 그쳐 실상에 있어서는 반공교육에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첨가하는 수준에서 기술되어 있었다.

86) 문교부(1981), 위의 글 참조.

결과적으로 반공교육기의 통일교육은 해방초기 ‘방어적 반공’에서 6·25전쟁과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적대적 반공’으로 심화되어 군부정권에 이르러서는 ‘대결과 경쟁’을 강조하는 반공교육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 2. 안보교육 시기

### 1) 통일교육 정책

제5차 교육과정(1988~1992)의 특징은 종래의 반공교육이 대북 및 대공산주의 경계에 너무 치우쳐 통일의지나 그 여건의 조성 노력에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라, 반공생활 영역의 내용을 공산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도록 바꾸고, 북한이 장차 우리와 함께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형제라는 측면과 함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위험한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반공’이란 이름 대신 ‘통일안보교육’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종래의 반공교육이 통일, 안보, 국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일만 내세울 경우 국방, 안보의 측면이 약화되었다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이며 통일을 강조하되 안보와 경계의 측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또한 교육내용도 민주시민정신을 고취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장하였다.<sup>87)</sup>

그러나 당시로서는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을 제안한 통일안보교육도 이제까지의 교육이 철저한 반공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극적 안보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반응과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sup>88)</sup>

1990년대 접어들면서 국제질서의 재조정,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의 진전 등은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즉 남북한 주민 모두가 민족공동체 성원으로서 화해하고 화합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통일 전후의 사회적인 혼란 등에 대비할 필요성과 통합된 민족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태도 및 역량을 배양할 필요성이 중요해지면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통일교육이 공식화된 것은 1991년 11월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을 개발하기 위한 총론이 결정되면서부터이고<sup>89)</sup> 특히 남북한 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서 통일교육이 더욱 구체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통일안보교육에 통일을 향한 열망과 긍정적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하되 우리의 체제, 생존, 그리고 통일의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

---

87) 교육정책자문회의,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1990, p. 18.

88) 남상현, “고등학교 통일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pp. 2-3.

89) 한명희,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교육월보」 123, 교육부, 1992.3. p. 37.

심도 아울러 갖추도록 교육하여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을 도모한 반면, 1990년대에 들어서에는 이상과 같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 통일안보교육의 중심을 통일 쪽으로 좀 더 이동시켰다. 이것은 기존의 안보교육이 통일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93년 3월 '통일교육 지도자료'를 제작하여 각급학교에 배포함으로써 새로운 통일교육의 요체를 교사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sup>90)</sup> 그리하여, 제6차 교육과정의 통일교육은 과거의 북한 현실에 대한 이질적 요소의 강조와 지나치게 개념과 원리 중심의 공산주의 이론 부분을 과감히 줄이는 한편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의 과제 및 민족 공동체의 번영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통일 후의 혼란갈등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의 미래상과 통일에 대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sup>91)</sup> 그러나 통일을 당위적이고 감정적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교육적 논리는 현실감을 결여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 2)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sup>92)</sup>

1988년 제5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는 경제교육의 강화로 1973년의 교육과정에서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로 분과 체계로 되돌아갔다. 내용 구성의 방향에 있어서는 경제 내용의 확충과, 민주 시민적 자질을 강

90) 최선옥(2004), 앞의 글, p. 77.

91) 한국도덕국민윤리과 교육학회 편, 「내용구조 개선에 역점을 둔 중학교 도덕과 교육개정」, 1992, p. 161.

92)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울: 문교부, 1988), (인터넷문서: 교육과정정보서비스, <http://www.kncis.or.kr>):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I」(서울: 교육부, 1992), pp. 140-160의 내용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과 관련된 뚜렷한 단원은 찾기 힘들다. <정치경제>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통일’이 필수적 과제라고 함으로써 이전의 정권에서 반공의 논리로 통일이 이용되었던 점을 반성하는 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교과 내용의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 전체의 사회 문화 현상을 안정적으로 재조명 하는데까지 이어짐”을 교육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던 <사회문화>과목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적 상황인 분단이나 통일의 과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인구 · 자원 · 환경 · 청소년 · 실업 · 노동 · 노인 · 여성 문제 등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산적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모색이 사회과의 중요한 교육 목표로 등장하면서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표3-5> 제5차 교육과정 <정치경제> 통일관련 단원 내용**

영역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국 가 와 정치생활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민주 정치 발전의 과제로는 우리 민족이 극복하여야 할 과제 즉 분단의 극복과 통일에 대하여 언급한다. 여기서는 최근의 정부의 적극적인 통일 정책 등에 유념하고 통일 당위성과 구체적인 방법 내지는 실현성 등에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6차 교육과정에서의 민족공동체 윤리를 강조하고, 통일에 대비한 교육으로 나아간다는 통일교육정책의 흐름은 사회과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제6차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

에 대비하기 위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고등학교 <정치>과목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국내정치의 민주화와 함께 ‘통일문제의 현실적 과제’를 정치과목 신설의 직접적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정치 과목은 21세기의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고 지향하도록 설정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기준에서도 “세계화 시대에 한국이 맡고 있는 통일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치과제를 밀도 있게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국제 감각을 갖춘 한국인상을 심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 체계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통일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경제>과목에서는 5차 교육과정에서는 없던 ‘남북한 경제교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남북경제교류의 성과와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주요 학습목표로서 제시된 바는 통일을 위한 준비의 하나로 남북한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이 갖는 의의를 이해하고, 경제 교류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펼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하며, 지금까지의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화해와 협력의 정신 아래 민족 공동체 정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임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표3-6> 제6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통일관련 단원 내용**

구분	단원	내용
정치	국제 관계와 한국 민주 정치의 과제	국제 사회의 성격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 국제 관계의 변화

		한국의 주요 외교 정책 한국의 국제적 위상 한국 민주 정치의 과제
경제	우리 경제의 발전과 당면 과제	우리 경제의 성립과 발전 과정 우리 경제의 환경 변화와 당면 과제 남북한 경제 교류와 통일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

※ <사회문화> 과목에선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제시 없음

한편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국제화·세계화와 함께 민주화·지방화의 세계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 국내적으로 ‘통일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용’으로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래 사회를 구체적으로 전망해 보고, 민족 통일 등 미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대사회의 발전과 미래에서 민족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인식하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체계에 있어서는 통일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6차 교육과정 사회과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을 사회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당위적 목표 제시에만 머물렀을 뿐 내용체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목표는 있으되 방법은 없는 교육내용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당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통일의 문제가 그러한 사회문제의 뒤로 밀려나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안보교육기에는 탈냉전의 국제환경 변화와 남한사회의 정치경제적 안정 및 성숙에 따라 통일교육이 정권의 영향력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시기였다. 통일의 명칭은 과거의 반공교육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변경되었고 안보와 통일에 대한 이중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민주시민정신을 고취하는 교육적 내용이 구성되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반영되어 종전까지 민주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반공’의 논리를 앞세우던 입장에서 벗어나, 통일이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안정을 위한 과제로 제시된 점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통일을 감정적 차원에서가 아닌 현실적 문제에서 접근하려는 노력도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실제교육내용의 조직에 유기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며 자유민주주의와 남한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에 머무르게 되었다.

### **3. 평화통일 교육기**

#### **1) 학교통일교육 정책**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획

기적 전환을 갖게 되었다. 5·6차 교육과정의 변화가 현실적 변화를 수용키 위한 수동적 변화라고 한다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교육내용으로 조직하고<sup>93)</sup> 정보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다양한 매체와 교수방법을 동원한 통일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통일부에서는 2000년부터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매년 발행하여 각급학교 기관 및 사회 통일교육기관에 무료로 배포하여 왔다. 통일교육지침은 통일교육지원법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통일교육의 내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94)</sup>

## 2)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sup>95)</sup>

제7차 사회과 교과서는 각 과목의 마지막 단원에 통일을 주제로 하는 학습내용이 조직되어 있다. 이에 따라 6차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보완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과목별 기본적 학습 내용을 습득한 후에 통일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에 나타난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과목에서는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국제사회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통일의 문제 또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와 맞

93) 이근철·오기성(2000), 앞의 책, pp. 96-97.

94) 차우규(2003), 앞의 책, p. 33.

95)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울: 교육부, 2001), pp. 234-290 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음.

물려 있음을 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와 더불어 국제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통일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과목에서는 통일비용과 같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는 편익과 통일비용 및 사회적 비용의 양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있다.

<사회문화>과목에서는 남북의 통일방안을 조사하여 비교해 보고,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여 통일의 장애요인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일을 향한 사회문화적 접근에 대하여 탐색하도록 하고 있다.

방법상에 있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탐구지향적 학습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전의 통일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론 중심의 학습보다는, 통일의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통일의 접근 방안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시각에서 탐구하는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적인 차원을 강조하여 통일문제와 관련된 명암의 양면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변화의 측면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의 문제가 각 단원의 마지막 단원에 국한되어 기술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즉, 마지막 단원 외에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주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실제 학교 수업에 있어 마지막 단원은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단원의 주제가 과연 실제 학교 수업에서 내실있게 전개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표3-7> 제7차 교육과정 일반사회 통일관련 단원 내용

구분	단원명	관련주제	학습내용
정치	(5)정치 발전의 과제	민족통일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과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상황 이해</li> <li>· 통일문제 해결 방안 탐색</li> <li>·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li> <li>· 통일문제 파악과 대비방안 탐색</li> </ul>
경제	(5)세계 시장과 한국경제의 미래전망	한국경제의 미래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한국의 경제적 과제</li> <li>· 통일 비용</li> <li>· 남북 경제협역의 역사와 문제점, 방향 모색</li> <li>· 통일을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양측면에서 이해</li> </ul>
사회 문화	(6)미래 사회의 전망과 대응	한 민족의 현재와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통일 방안의 차이점</li> <li>· 통일의 장애 요인</li> <li>· 민족통일을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의 탐색</li> </ul>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화해 분위기는 현실적 차원에서의 ‘통일’의 문제를 생각해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통일교육은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의 차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논의와 이에 따른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일반사회과에 있어서도 각 과목 마지막 단원에 ‘통일’문제를 주제로 설정하고 탐구와 토론을 통해 통일의 문제에 접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변화하던 우리의 통일교육이 이제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교육으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IV. 사회과 교과서의 북한 관련 내용 분석

### 1. 반공교육 시기

#### 1) 제1차·2차 교육과정

##### ① 제1차 교육과정

<표4-1>을 보면, 북한관련 내용이 주로 정치철학적 측면에 치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부정적 수식어구를 동원함으로써 감정적 차원에서 이들을 비판과 견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북한 정권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소련의 정치 현실을 비판적 시각에서 기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 사회의 모순<sup>96)</sup>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철학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사상의 기반인 마르크스·엥겔스의 이론을 비판적 입장에서 소개하면서, 북한 사회의 정치적 철학인 공산주의는 혼란의 원인이며 견제의 대상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공

---

96) ‘노동자들의 사회라는 목적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수단으로 와진된 상태’라는 모순을 의미함

산주의 철학을 따르는 자들을 폄하함으로써 이를 경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임을 우회(迂廻)하여 암시하고 있다.

“6·25 사변 전까지는 일부의 지식 계급과 도시의 소시민과 농촌의 무식하고 순박한 농민들은 공산주의자들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서, 정말 공산주의가 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자가 적지 않았다.”<sup>97)</sup>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는 광물 등의 공업자원이 풍부하고, 중공업이 발달해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남한에는 송진(松田)을 단절(斷切)함으로서 타격이 되었다는 설명을 이었고, 남북한을 연결하여 경제적 유기성을 찾자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을 실지회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서 북한에 보이는 인식구조는 뚜렷하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괴뢰집단, 특권 계급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피지배층에 대하여는 국민·주민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 전체적으로는 폭력적인 권력이 지배하는 권력국가, 우리나라의 북쪽, 북한 등의 용어로 주제와 기술 목적에 따라 지칭을 달리했다.

교과서에서의 북한 정권은 ‘민주주의’를 사칭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괴롭히는 가해자로 묘사된다. 북한 정권은 침략을 위해 호시탐탐(虎

---

97) 한태연, 「(고등학교 사회생활과)새로운 문화의 창조」(서울: 일한도서, 1956), p. 7.

視耽耽)하는 존재로서,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방대한 지출을 하게 하는 원인이며, 폭력·군비 확충 외에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 사회로 주민을 사상의 노예로 만들고 강제노동으로 혹사당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은 우리가 구출해야 할 대상이다.<sup>98)</sup>

**<표4-1> 제1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어구**

구분 영역	설명적 어구 (explanative)	평가적 어구 (valuative)
정치 철학	유물사관의 역사철학에 기반(문12) 사회개량주의(문13) 사회주의 사상(정217)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문219) 유물사관·잉여가치설·계급투쟁설·국가이론(문219-220) 폭력적 혁명(문12) 유물사관은 공산운동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도구일뿐(문222) 미풍양속을 해침(문55)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적 침략(문65) 침입(문218) 견제의 대상(문66) 혼란의 원인(정218) 타락의 원인(문55)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비현실적 공상가(문221) 대답하고 허무맹랑(문221) 공상가(문221) 독단적 가설(222) 철모르는 일부국민, 무식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동경하는 철학(문7) 어리석은 자들의 철학(문55) 무자비한(문13)
북한 정권	(소련의 정치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 비판)	주민을 괴롭히는(문7) 평화를 파괴(문13)

98) “우리는 하루바삐 아직도 공산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해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유진오, 「(고등학교 사회생활과)정치와 사회」(서울: 일조각, 1956), p. 227.

(정치 현상)	노동자 착취(정224) 공산당이라는 명칭에 민중을 멀리할까 염려하여 노동당이라 부름(정227) '민주주의 공화국'을 사칭(정224)	지긋지긋한(문7)
군사 외교	6·25 일으킴(정153) 침략을 위한 군사 준비(정153)	만행(문13)
경제	중공업 발달(문8, 일44) 공업자원 풍부(정232) 노동력설명(경50) (남한으로의) 송전단절(送電斷切)로 (남한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경71) 중공업지대(경73)	(북한의 중공업지대와 남 한의 경공업 지대 연결하 여 경제통합으로) 유기성 찾아야(경73)
교육 · 문화	군비 확충에만 힘쓴다(경201) 사회문제에 해결 방안이 없다(경201)	전통적 미풍양속 와해(문 55) 폭력적(경201) 사상의 노예(경201)
북한 주민	강제노동을 한다(경142) 자유를 잃었다.(경129) (정부로부터) 시달림(문7)	괴로움(문7, 정225) 신음하는(정237)
명칭	전 체	북한, 공산국가(간접 지칭), 우리나라의 북쪽(정12), 권력국가(경144), 공산치하(경227)
	정 권	괴뢰, 괴뢰집단, 특권 계급, 공산주의자
	국 민	주민, 일반 국민,

※( )안은 과목명과 출처의 해당면(과목명, page)

문: 한태연, 「(고등학교사회과)문화의 창조」(서울: 일한도서, 1956)

정: 유진오, 「(고등학교공민)정치와 사회」(서울: 일조작, 1956)

경: 박일경, 「(고등학교공민)경제와 사회」(서울: 사조사, 1962)

## ② 제2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기의 시기에는 남북관계에 있어 적십자 회담(1971)이 진행되고 남북공동성명(1972)이 발표된 시기로서 남북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물꼬가 열린 시기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남한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한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정권은 본질적으로 악랄하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무력통일보다도 힘들 것<sup>99)</sup>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표4-2>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사회의 전분야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사회에 공산주의 비판 단원이 신설되고, 반공 교육의 수위가 강화된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을 묘사하는 어구는 보다 과격해지고 폭력적인 수식어가 난무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때 공산주의나 소련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 본질적으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음은 삽화를 통해 확인된다. 예컨대, 공산국가의 선거제도가 비민주적이라면서 “소비에트연방최고회의대의원의 선거가 한명의 후보자를 두고 가부(可否)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기술한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 옆에 보여지는 삽화에는 ‘공산독재 치하의 선거’(그림4-1)라는 제목 하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투표를 하고 있다.

언어로 설명하는 “소련의 상황 = 북한의 정치 현실”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다른 곳에서도 수차례 발견된다. 교과서에서 비판의 가시적 대상은 ‘공산주의’였다 할지라도 비판의 본질은 ‘북한 정권’이었던 것이다.

---

99) 김기석 외, 「인문계고등학교 일반사회」(서울: 동아출판사, 1974), p. 80.

<그림4-1> 공산 독재의 선거 제도



<출처> 장경학 외, 「(인문계 고등학교)일반사회」, (서울: 교학사, 1968), p. 56.

공산주의 이론의 기원에서부터 레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이론적 내용을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용납될 수 없고 분쇄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 정치는 일국일당제도로써 공산당에 입당하는 것이 정치적 실권을 얻는 길로서, 당에 들어간 사람도 당내의 정권 투쟁에서 언제나 반동분자(反動分子)로 내몰려 숙청될는지 예측할 수 없는<sup>100)</sup> 무시무시한 조직으로 묘사된다. 공산주의 하의 선거제도는 민주사회에서와 같이 국민에 대하여 지도자의 정치적 신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지명하는 후보자 1인에 대하여 가부(可否)를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형식

100) 장경학 외, 「인문계고등학교 일반사회」 (서울: 교학사, 1968), p. 56.

적으로 진행될 뿐 실제에는 공산당 독재를 합법화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정치의 이론과 실체는 허위에 차있고 인권을 유리하며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정치 현실이다.

경제면의 기술을 살펴보면,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사유재산제도 폐지와 계획경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개인적인 기업경영이나 직업의 선택, 그리고 전환의 자유조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이나 생산기술의 자발적 개량은 기대하기 힘들고,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거둘 수 있는 잇점은 도저히 찾기 힘들다고 하면서 비능률과 획일화로 차질(蹉跎)만을 일으키는 체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획일적인 공산주의적 주입식 교육으로 공산주의 광신도가 아닌 사람은 개인의 의도나 능력에 상관없이 공산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가 되는 비참한 사회이다. 각종 문화 활동은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기 때문에, 문화는 획일화되고 어용(御用)문화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 창조는 물론 도저히 문화의 발전이 불가능한 사회이다.

북한 주민들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고, 가족제도마저 해체된 가운데 아이는 탁아소에서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각종 정치단체 가입을 강요당한다. 공산주의 광신도가 되지 않으면 결국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데 공산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노동자의 생활로서 일정한 작업량이 할당되어 초과달성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현실적 모

순에 처해 있는 것이 공산주의(북한) 생활의 현실이다.<sup>101)</sup>

**<그림4-2> 북한공산치하의 학생 강제 동원**



장경학 외, 「(인문계고등학교)일반사회」  
(서울: 교학사, 1968), p. 51.

제2차 교육과정기의 일반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은 어느 차시보다도 악랄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으며 1차 교과서에서 ‘주민’ 또는 ‘일반국민’으로 지칭되던 북한주민들은 ‘선한 양민’과 공산주의에 열성하는 ‘동조자들’로 분류되었다. 북한사회는 빈곤과 가난과 불안만이 존재하는 암울한 사회로서 이들과의 경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신체제의 과업을 성실히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

101) 장경학(1968), 위의 책, pp. 60-61.

<표4-2> 제2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 어구

구분 영역	설명적 어구 (explanative)	평가적 어구 (valuative)
정치철학	허위선전(교44) 세계적화의 야욕(교44) 마르크스·엔겔스가 만들었다(교45) 생산수단의 공유와 계획경제의 체계로써 계급없는 이상사회 실현을 주장(교45) 레닌의 이론추가(교45) 소련의 공인된 이데올로기(교45) 자기들 스스로는 사회주의 라고 한다(교45) 인간의 자유 무시(교45) 무력혁명 옹호(교45) 정치적 구호(교46) 지상낙원을 약속함으로써 인간의 약점을 노림(교46) 사회의 허점을 이용(교46)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비 주장(교46) 잉여가치설·자본주의 붕괴론·계급투쟁론 (교46) 헤겔철학에서 방법을 빌림(교48) 유물론(교48) 하부구조가 변하면 상부구조가 변하는 변 증법적 관계를 주장(교48) 자본주의 몰락을 예언(교49) 정치적 선전(교51) 일당독재(교53) 우리 고유의 제도가 아니다(동58) 소련이 그의 조국(동58)	야망(교44) 나쁘다(교44) 모순(교44) 용납될 수 없다(교44) 분쇄해야 한다(교44) (해결해야 할)정치·사회 문 제(교45) 독단(교45) 민주주의에의 도전(교45) 그릇됨(교46) 거짓됨(교46) 민족 분열(교46) 민주주의 존립을 위한 과제 (교46) 분쟁을 조장(교46) 독단적(교48) 많은 비판을 받아들임(교48) 크나큰 오류(교48) 개인 무시(교50) 민족부인(교50) 자유말살(교50) 불합리(교50) 허황한 미신(교51) 그릇된 가설(교51) 허위(교51) 인간성 무시(교69) 허망(교69) 승리의 대상(교69) 악의 세력(동60) 허위(동60) 기만(동62) 악랄(동62)
북한정	민족고유문화 말살·전통 미풍양속 배척	획책(교51)

권 (정치 현상)	(교51) 민중탄압(교53) 인권과 자유를 유린·말살(교53) 20세기 과도적 전제정치(專制政治)(교53) 공산당 독재(교53) 일국일당(一國一黨)제도(교55) 당에 반대하면 반동분자로 숙청(교56) 선거제도는 가부(可否) 투표 방식(교56) 선거는 공산주의를 합법화하는 도구(교56) 권력집중(교57) 노동조합은 국가의 어용기관(교61) 온갖 부문에 (정치가)침투(교61) 공산당 정책의 수단(교61) 선전·선동(교62) 사회혁명(교64) 전제정치(동63) 전쟁준비(동69) 북한 전역의 요새화(동79)	모순(교56) 자유선택권의 박탈(교56) (공산주의 이론 뿐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허위(교57) 인권 유린(교57) 자유 박탈(교57) 인간성 무시(교69) 승리·분쇄의 대상(교70) 괴멸성(동63) 간악(동64) 완강(동64) 광분(동69) (권력에 주린)늑대(동69) 독재자(동69) 만행(동79)
군사 외교	심리전술·사상전·무력침략(교64) 정복의 야망(교65)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복욕(교65) 세계적화정책(교66) 민족분열 조장(교65) 무력침략(교67) 평화존론은 일시적 전술(교64) 간첩난파(교70) 불온 책자·문서 투입(교70) 적화의 손길(교70) 6·25 남침(동46) 음성적인 침투와 공격(동80)	광분(교65) 분쇄의 대상(교65) 선동(교65) 파괴(교65) (정복을 위해)호시탐탐(虎視 耽耽)(교66) 상투적 기만(교67) 악랄(교70) 경계의 대상(교70) 나뻘(교70) 호전적(동75) 불장난(동82)
경제	생산수단의 공유화(교57) 근로소득·저축·가정부업·가재·가구집 기 및 개인의 소비물은 사적 소유 인정(교 57-58) 생산의욕·노동자의 보람이 없음(교58) 직업선택의 자유 없음(교59) 지배자의 자의(自意)에 종속(교59) 비능률· 획일화(교59)	잇점(利點)은 도저히 없음 (교58)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제도 (교59) 차질(교59) 해마다 실패(교59) 나뻘(교59) 노예같은 생활(동60)

	수탈경제(동70) 까다로운 배급경제(동70)	(철저히 당에 의한다는 의미에서)철두철미(동69)
교육 · 문화	모든 단체는 당에 종속(교60) 당의 통제(교61) 어용문화(교63) 무신론(無神論)(교63) 언론·출판·학문·예술은 공산당의 수단(교62) 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적 인간'양성(교62) 주입식 교육(교62) 사상의 통일을 강제(교63) 정치의 수단화(교63) 당(黨)을 찬미(교63) 새로운 노예사회(동71) 학원은 상호감시의 장소(동73) 교조주의 교육(동72) 성분에 따라 차별(동72) 문화는 선전도구(동73) 문화의 이름을 빌린 도장업·현수막(동74)	창의성의 빈곤(교63) 획일화(교62) 개성의 상실(교62) 인간존엄성의 유린(교62) 민주주의 문화관은 무시(교63) 창조는 존재치 않음(교63) 공산주의의 도구화(동73) (학원은)제품공장(동73) (공산주의의 문화활동은)문화활동에 대한 모독(동74)
북한주 민생활	인간으로서의 인격 발전 저지(교59) 국가계획에 기계처럼 복종(교59)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함(교60) 계급의 구성분자로 파악(교60) 당의 지배에 종속(교60) 당의 통제(교60) 가족 생활 해체(교60) 가족제도 파괴(교60) 노동의 강요(교61) 소년단·청년동맹·노동조합 단체에 가입해야만 한다(교60) 신뢰에 의한 대인관계 없음(교61) 시달리고 굶주림(동70) 권리의 박탈(동73) 자유 박탈(동73) 주거제한·상호감시·오호작통·책임량의 노동·강요된 회의 출석(동73)	불신과 감시(교60) 정치적 고발을 미덕으로 여김(교61) 비극(교61) 신뢰 없음(교61) 비참(교61) 밀고와 고발이 훌륭한 인격이 됨(교61) 모순(교61) '소나 말'과 같이 흑사(동70) 상호 불신(동73)
명칭	전체	북한, 공산주의

정 권	당(黨), 공산당, 북한 괴뢰, 몇몇 수괴 일파(동62), 공산 집권자들, 정치 체제(동52)
국 민	시민(교56), 국민(교58), 민중↔당세포(공산주의 열성 동조자들)(동65), 양민(동66)

※( )안은 출판사와 출처의 해당면(출판사, page)

교: 장경학 · 한상범 · 김하원, 「인문계고등학교 일반사회」(서울: 교학사, 1968)

동: 김기석 · 박일경 · 육지수 · 한기연, 「인문계고등학교 일반사회」(서울: 동아 출판사, 1974)

## 2) 제3·4차 교육과정

### ① 제3차 교육과정

3차 교육과정기 일반사회 영역의 교과서에서는 ‘반공교육’의 강조를 위해 도덕과를 사회과에서 분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주의 비판 어구들이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 전체에 퍼져있던 반공의 논리는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각 단원마다 녹아들어 어느 주제에서나 반공이 강조되고 북한을 비판하는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민족의 분단이 ‘강대국들의 타협에 의한 양단’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강대국 간의 타협이 현재 누그러진듯 보이지만, 그것은 표면에 불과할 뿐 이데올로기 대립 자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트남의 공산화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양대 진영이 가장 심각하게

대립하는 곳으로서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양상은 당시의 미·소 대립 등 당시의 국제환경의 분위기에 편승해 남북대화의 창구를 열긴 했지만, 정권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의지가 없었고, 북한의 위협을 정권 정당화의 유지 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른 태도면의 이중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즉, 북한이 동등한 입장으로서는 대화 상대라기보다는 악랄하지만, 통일은 당위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아량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평화통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력의 강화이다. 따라서 군부의 정권장악은 당연한 귀결이며 이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이 확립된다는 논리이다.

“4·19의거 후 극도의 사회 혼란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분단된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통일 야욕 앞에 국가 안보의 기틀 조차 위협당하였으므로 마침내 1961년 5월 16일에 군사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sup>102)</sup>

이렇게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있어 우리가 국가 발전을 게을리 하면 안되는 이유로 ‘북한의 침투 야욕’을 앞세움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는 적대적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교육과정에서 볼 수 있듯 <정치경제>교과서에 ‘남북한 경제 비교’<sup>103)</sup>

---

102) 고등학교일반사회·정치경제교과서편찬위원회(1975), 「(인문계고등학교일반사회정치경제 I」(서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1975), p. 33.

단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단원의 구성은 남북한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진술하고, ‘북한 경제 현실’이라는 소단원 안에 ‘북한경제의 특징·경제규모·공업·농업·북한주민의 실정’을 서술하면서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의 한계성을 지적한다.

“이를테면, 북한공산집단과 같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의 경제단위가 아주 낮은 수준의 자급경제체제를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해(自害)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중략)...북한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더욱 뚜렷하게 노출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경제의 효율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sup>104)</sup>

이 단원은 일정한 근거 지표<sup>105)</sup>를 제시하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면에서 뚜렷한 설명 없이 비방의 수식어를 남발하던 이전의 교과서에 비해 객관성을 일부 확보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 경제비교는 결국 남한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과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의 성공을 강조하면서 남한 경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난다. 북한은 모순된 경제체제로 인하여 낙후된, 그리고 도저히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회로 그려진다. 그밖에 남북 간의 이러한 경제적 격차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미래 상황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결국 남북한 경제 비교 단원의 주제는 ‘우리는 북한을 이겼다!’가 되는 것이다.

---

103) 위의 책, pp. 251-259.

104) 고등학교일반사회·정치경제교과서편찬위원회(1975), 위의 책, p. 258.

105) 북한의 국민 총생산(1972년 당시 약 38억 달러, 남한 98억 달러)·수출과 수입액, 각종 경제 정책명과 그 내용 등에 대해 5면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위의 책, pp. 253-257.)

이러한 경제구조의 모순으로 각박한 경제현실 속에서 북한의 주민생활의 수준이 저하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공산세뇌에 의해 ‘공산주의적 도구’로 양산된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문화적 결핍이 심화되고 교육·가족 제도를 비롯한 모든 사회제도가 모순된 구조에 있다고 기술한다. 북한주민의 강제노동은 2차에서 4차 교과서에 걸쳐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3차 교과서에서는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4-3> 협동



<그림4-4>북한주민의 강제노동



<그림4-3><sup>106)</sup>과 <그림4-4><sup>107)</sup>는 각각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 주인공들이다. 같은 작업을 하는 듯 보이는 두 그림이 한편의 교과서에서 하나는 ‘협동’이라는 표현으로 미화되고 다른 하나는 ‘강제노동’이라는 수식어로 설명됨으로써 교과서에서의 북한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을 읽을 수 있는 예이다.

“우리는 지금 민족 통일이라는 과제를 놓고 공산주의자들의 격심한 도

106) 고등학교일반사회·정치경제교과서편찬위원회(1975), 앞의 책, p. 212.

107) 위의 책, p. 255.

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략)… 북한 공산 집단은 공산 독재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단절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 문화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sup>108)</sup>

그리하여 북한에 대한 교과서 전체의 내용구조는 북한은 ‘대화의 상대’이지만, 악랄한 본성을 고칠 수 없는 부류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더욱 철저히 하고, 반공의식을 확고히 하여 이들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대결’의 상대라는 골격을 갖는다.

**<표4-3> 제3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 어구**

구분 영역	설명적 어구 (explanative)	평가적 어구 (valuative)
정치철학	역사를 계급의 투쟁으로만 본다(정5) 모든 인간관계는 대립과 투쟁으로 설정(정5) 김일성 유일사상(정6) 김일성 신격화(정8) 김일성 우상화(정8)	동족을 분열(정5)
북한정권 (정치현상)	공산독재정치(사58) 적화야욕(사127)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정5) 찬탁·남북한 총선거 반대(정6)	망동(사4)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광신적·호전적(사5) 전투적(사58)

108) 고등학교 일반사회정치경제 교과서 편찬 위원회, 「(인문계고등학교 일반사회·정치경제Ⅱ)사회문화」(서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1976), p. 58.

	인간을 도구화(정6) 복종만을 강요함(정6) (주민의 불만을 억압하기 위해)긴장 조성(정6) 남침준비 완료(정8) (해방 직후)남한으로 내려오던 전력을 단절함으로 남한의 산업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정158)	민족적 이익 배반(정6) 분단의 비극의 원인(정6) 광분(정6) 악랄(정11) 잔학(정9) 기만적(정254)
군사 외교	전쟁 준비(사5) 남침을 감행할 태세(사5)->대비해야 군사적 모험의 계기를 찾는다(사6) 남한 파괴(사6) 도발 회책(사7) 6·25전쟁을 일으킴(사58) (침략 목적으로)땅굴을 팠(정6) 무력적화야육(정6) 재남침 야욕(정14) 소련의 지령(정6) 소련의 위성국(정45)	(무력행사에)혈안(사6) 무모(사6) 고의적 외교 술책(정13) 혼란조성(정13)
경제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정252) 개인의 창의성 없음(정252) 비능률(정252) 생산수단 국유화(정252) 협동농장 운영(정252) 표면상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정253) 김일성 유일사상에 종속(정253) 일부 소비재 제외한 모든 생산수단과 재산은 공산 집단의 소유(정252) 조세부담률(우리는 15%인데 반해)70%(정254) 수입은 군비와 선전비로 집중 투입(정254) 경제의 목표는 한반도 적화(정254) (무력 남침 위한) 군수공업 위주(정254) 생산 품질 낮고 생산성 저조(정254) 생활 필수품(경공업 부문)확대를 억제(정256) 중공업 우선정책(정255)	획일적(정252) 관료주의 비대현상(정252) 능률의 저하(정252) 기만적(정254) 경제의 목적은 군사 한계성(정257)
교육	민족문화 왜곡(사58) 민족 문화의 전통 말살(사58)	민족사의 정통성 모독(정6)

문 화	협동의 민속놀이인 군사놀이화되었다(사58) 표준말 무시(사59) 예술을 선전도구화(사59) 개인숭배의 대상(사59)	
북한주 민생활	학정에 시달림(사4) 가정생활이 공산통치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강제로 해체(사58) 부자와 부부 관계는 대립적(사59) 공경하고 사랑하는 기풍이 사라짐(사59) 부모와 자식이 이간당함(정5) (서로)고발(정5) 복종을 강요당함(정6) (어떠한 자유)도 허용되지 않음(정6) 임금노동자로 전락의욕 저하(정254) 강제노동(정254) 계급에 따른 식량 배급 차등(정257)	괴로움(사5) 인간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잃음(정6) 의욕 저하(정252) 궁핍(정256) 차별(정257)
명 칭	전 체	한핏줄(사5), 북한
	정 권	북한공산집단(사6), 공산주의자(사6), 공산집단(사6)
	국 민	무고한 주민(사4), 한민족

※( )안은 과목명과 출처의 해당면(과목명, page)

정: 고등학교 일반사회·정치경제 교과서 편찬 위원회, 「(인문계고등학교일반  
사회정치경제 I)정치경제」(서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1975)

사: 고등학교 일반사회·정치경제 교과서 편찬 위원회, 「(인문계고등학교 일  
반사회·정치경제 II)사회문화」(서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1976)

## ② 제4차 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은 3차 교과서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그 본질이 우리와 전혀 다른 이

질적인 사회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있어 모순이 내포되어 민족적 정통성을 찾아볼 수 없는 집단으로 묘사된다. 항상 남침을 노리는 무력 집단이므로 이들에 대한 안보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하며, 사회 각 분야의 발달은 북한에 대한 절대 우위의 국력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군부정권 창출의 정당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같다.

<표4-4> 제4차 교육과정 사회과 교과서의 북한 관련 내용

구분 영역	설명적 어구 (explanative)	평가적 어구 (valuative)
정치철학	유일사상(사 I 9) 마르크스 이론(사 I 119) 주제·자주의 강조(사 I 122) 전세계의 웃음거리(사 I 122) 냉소의 대상(사 I 122)	공허(사 I 123)한 이론 허구(사 I 123) 거짓(사 I 123) 조작(사 I 123)
북한정권 (정치현상)	아웅산묘소 폭발사건(사 I 9)을 일으킴 족벌에 의한 공산 독재(사 I 8) 세력기반 다지는 데 현안, 나라의 어려움은 뒷전(사 I 10) 신탁통치 찬성(사 I 10) 민족분열 조장(사 I 10) 통일국가수립 방해(사 I 10) 1인독재(사 I 8) 남한의 성실한 제의 외면(사 I 13) 남북대화 회피(사 I 15) 적화통일 고수(사 I 13) 왕조적 세습제(사 II 123)	사리에 맞지 않음(사 I 11) 도발적(사 I 12) 광분(사 I 11) 일방적(사 I 13) 저의(사 I 13)가 따로 있음 망동(사 II 12) 도발적(사 II 12)
군사외교	게릴라·무기 수출(사 I 9) 재침노림(사 I 18) 파괴공작(사 II 20) 4대군사 노선(사 I 12) 군비력 증강(사 I 5) 대외노선이 소련의존→중공의존→중·소	온갖술책(교묘함)(사 I 12)

	종립으로 변화됨(사 I 121) 휴전협정 위반(사 II 94) 소련과 중공의 지지를 받음(사 II 107)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함(사 I 5) 남한 사회의 혼란 획책(사 I 12) 위장평화공세(사 I 12) 평화통일방해(사 I 13)	
경제	세입 북한 GNP의 75~95%, 세출은 (소위) 인민경제비, 군사비 및 사회 문화시책비로 구성(사 I 278)	경직(사 I 276)
교육 · 문화	폐쇄사회(사 I 15) 민족사의 바른 줄기 부정(사 II 10) 전통·문화 파괴(사 II 10)	
북한주 민	5호 담당제(사 I 10)로 감시 당함 가족사이에서도 감시(사 I 18) 고발을 강요당함(사 I 9) 통제당함(사 I 276)	꿈과 희망을 잃음(사 I 9) 불평 불만의 심화(사 I 9) 공포(사 I 10) 냉혹(사 I 276)
명칭	전 체	그들, 북한, 북한 공산주의
	정 권	북한공산집단, 북한공산주의자, 북한측, (남 한에 대한)외부의 침략 세력, 공산정권, 공 산세습왕조
	국 민	선량한 동포, 주민, 국민

※( )안은 과목명과 출처의 해당면(과목명, page)

사 I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사회 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4)

사 II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사회 I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5)

다만 <표4-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전의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정치철학에 대한 설명이 줄었다. 3차 교과서에는 마르크스 이론을 비롯한 사회주의 이론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이 있었지만, 4차 교과서에서는 우선 양적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 비판이 줄어들면은, 북한 정권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충당된다. 체제의 우위를 확신한 정부의 자신감과 잇따른 북한과의 정치적 마찰로 인한 대결적 구도가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표면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계속 군사력을 증강해 오다가, 1950년 6월 25일 대거 남침해 왔다.”<sup>109)</sup>

“그동안 북한공산집단은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일삼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 남한의 적화를 노리고 있다...(중략)...따라서 우리의 최대 과제는 북한 공산 집단의 남침 야욕을 분쇄하고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는 일이다.”<sup>110)</sup>

결국,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격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권리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안보의 위협 세력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외부의 침략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들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략)...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자제하는 아량과 슬기가 필요하다.”<sup>111)</sup>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공장은 주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그나마 대부분은 자연 자원의 분포 때문

---

109) 한국교육개발원(1984), 앞의 책, p. 9.

110) 위의 책, p. 94.

111) 위의 책, p. 118.

에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남쪽에는 섬유공업 등 경공업의 일부가 있을 뿐이었다.”<sup>112)</sup> 라고 하면서 6·25직후 남한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유리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1, 2차 교과서부터 강조되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1, 2차 교과서에서는 북한측의 송전단절을 비판하고 있는데, 3, 4차에서는 그 내용이 빠졌다. 경제적 차원의 북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감소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다. 즉, 북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1, 2차 교육과정기에는 강조되었던 부분이, 경제적 성장으로 인하여 기술의 필요를 약화시킨 것이다.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는 단원은 다음과 같은 연습문제로 끝맺음을 한다.

<사회 I> ‘V. 경제생활 - 7. 한국 경제의 현실과 당면과제 - (7) 북한의 경제와 남북한 경제의 비교’의 연습문제

“7. 남북한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8. 공산 국가 경제의 비효율성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9. 북한 경제에서 기술 수준이 향상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sup>113)</sup>

3, 4차 교과서의 이 단원은 학습 내용의 목표가 북한의 ‘경제 현실 인식’에 그치며, 발전방향의 제시나 주체적인 우리의 역할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맥락을 함께 한다. 그러나, 3차에

112) 위의 책, p. 257.

113) 위의 책, p. 282.

한편, 3차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남북한 경제비교 단원의 학습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자 (2) 북한 경제의 비능률성의 원인을 알아보자 (3) 북한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알아보자(고등학교일반사회·정치경제 교과서 편찬 위원회(1975, 정치경제), 앞의 책, p. 259.)

비해 4차에서는 ‘기술 수준이 향상되기 어렵다는’ 구체적 가설을 증명하게끔 함으로써 학습과정에서 인식의 폭을 더욱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은 정치를 비롯한 사회·경제·문화 각 부문에 모순을 내포한 사회이며, 우리의 문화 전통과 미풍양속을 왜곡·말살<sup>114)</sup>된 사회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 공산 집단은 가족 중심의 사회가 공산 통치에 방해가 된다 하여 부모와 자식을 이간시키고, 가족 사이에도 서로 감시하게 하며, 독재 체제에 어긋나는 일은 고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소위 5호 담당제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서로 감시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단란한 가정과 이웃간의 인정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 오던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sup>115)</sup>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통제로 인해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채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우리는 북한 정권을 압도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 우리의 평화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공산 집단은 남북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데 그 “저의”는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 주민들이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어 그들의 지배체제

---

114)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사회 I」(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5), p. 56-57.

115) 한국교육개발원(1984), 앞의 책, pp. 9-11.

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16)</sup>

결과적으로 남한은 체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쟁준비에 광분한 집단으로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언제나 일방적이고 저의가 따로 있다. 또한 이러한 정권의 특성에 의해 북한 사회는 이질화가 심화된 집단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국방의 의무<sup>117)</sup>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미미하나마 북한인식에 대한 변화의 흐름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사회문화>영역에서 두드러진다. 다음은 사회과 교과서의 머리말 내용 중 일부이다.

“오랜 역사와 빛나는 문화적 전통을 이어 온 우리 민족은, 근대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뒤늦은 관계로, 근대적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국토 분단의 비운과 문화적 단절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중략)…은 민족의 영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군사적 긴장 속에서 이념적 대결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이하생략)”<sup>118)</sup>

남한과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같은 역사적 운명을 가진 것으로 진술하면서, 남북 분단의 원인을 북한의 ‘적화야욕’이라고 못박고 들어가던 다른 교과서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북

---

116) 위의 책, p. 15.

117) 위의 책, p. 16.

118) 한국교육개발원(1985), 앞의 책, 머리말.

한에 대한 내용 전개가 직접적이고 과격한 비방보다는 보다 완곡한 표현을 택하는 쪽으로 조금씩 선회되고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 2. 안보교육 시기

### 1) 제5차 교육과정

5차 일반사회과 교과서는 <표4-5>에서와 같이 북한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줄었다. 북한의 교육·문화나,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묘사가 없어지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조선노동당’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설명이 삽입된 것은 가장 큰 변화로 지적할 수 있다. 이로써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서술은 반공교육기와 현저하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5차 <정치경제>교과서에서는 민주정치의 발전과 평화통일이 현실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민주정치의 제도화와 안정화는 또다른 국가 목표인 통일·안보·경제발전·복지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라는 것이다.<sup>119)</sup> 이점은 문서상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인식을 반영한 기술로 판단된다.

---

119) 한국교육개발원(1990), 「정치경제」, 머리말.

5차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정치 형태가 처음으로 제시된다. 기존의 4차 교육과정까지는 소련의 정치형태를 설명하고 이를 비판함으로써, 우회하여 북한의 정치적 기반을 설명한데 반해 5차에서는 북한정권을 하나의 정치형태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의 범주에서 파악하던 종전의 시각과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다.

비록 3권 분립이 외형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의 교과서에서 북한정권을 괴뢰집단으로 한정짓고, 무력침략 등 군사 준비 외에는 어떠한 사회문제 해결도 없다던 설명과 대별된다. 특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민주주의 국가의 의회에 해당’<sup>120)</sup>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삽화로 제시한 부분은 인상적이다. 북한에도 정치과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은 사회과에 있어서 큰 변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의 것일 뿐 실제로는 조선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 국가주석제는 주석이 3권 위에 군림하는 비정상적인 권력구조 형태로서 우리의 대통령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점<sup>121)</sup>을 거듭 강조하여 제시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설명하는데 조심스러운 점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설명을 생략하고 ‘독재정치’로 일축했던 종전까지의 설명에 비하면 내용의 구체성이 더해진 점은 분명한 변화로 지적할 수 있다. 더불어, 종전까지 북한 공산당이라 칭했던 바를 ‘조선 노동당’이라는 북한의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변화의 노력을 반영한 부분이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북한의 정치구조를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설명하

---

120) 한국교육개발원(1990), 정치경제, p. 70.

121) 위의 책, p. 71.

고 있지만 그들의 ‘독특한’<sup>122)</sup>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내용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5> 북한의 최고 인민 회의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세계가 자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임에 따라, 남북한도 공동노력을 전개해야한다<sup>123)</sup>라고 함으로써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 재정립의 필요를 가진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적인 조건<sup>124)</sup>이라는 논리는 종전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강조하였던 논리와 비교된다.

---

122) 위의 책, p. 71.

123) 위의 책, p. 85.

124) 위의 책, p. 96.

남북분단으로 경제권이 양분되었다는<sup>125)</sup> 기술도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분단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4차 교과서까지와 구별된다.

한편, <사회문화>에서는 머리말에서 국토분단으로 인해 문화적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 있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북한의 문화현상에 대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 점이 아쉽다. 마지막 단원의 주제인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에 있어서도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야기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북한과의 문화 이질화와 통일사회에 대비하여 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고 있지 않다.

**<표4-5> 제5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 어구**

구분 영역	설명적 어구 (explanative)	평가적 어구 (valuative)
정치철학	사회주의(정165) (사회주의 이론은)소유형태에 대한 불만에 기원(정157) 1948 소위 ‘공산당 선언’(정106) 마르크스의 ‘자본론’(정106)이 방법 제시	.
북한정권 (정치현상)	최고인민회의(입법부)·중앙인민위원회 및 정무원(행정부)·중앙재판소(사법부)(정 70-71) 국가주석제(정71) 조선노동당(정71)	대통령제와는 비교 불가(정 71) 독특(정71) (명목에 불과한 정치기관) (정70)
군사	적십자 회담·남북조절위원회 중단(정92)	일방적(정92)

125) 위의 책, p. 299.

외교		
경제	생산수단의 공유화·국유화(정 167) 국가의 계획경제(정 167) 국가의 필요만을 충족(정 167) 교류의 대상(정 334) 배급제도(정 155)	.
교육 · 문화	.	.
북한주 민생활	.	.
명칭	전체	동족(정 58), 북한
	정권	조선 노동당(정 70), 공산당(정 70)
	국민	.

※( )안은 과목명과 출처의 해당면(과목명, page)

정: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정치·경제」(서울: 교육부, 1990)

사: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사회·문화」(서울: 교육부, 1991)

## 2) 제6차 교육과정

<표4-6>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6차 교과서에서의 북한관련 내용의 특징은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현실적 교류의 내용이 추가된 점, 5차 교과서에서의 북한 정치체제 설명이 빠진 점, 그리고 북한주민 생활의 이질성을 재삼입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당시 교육과정에는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교과서 실제에서는 경제교류의 협력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능적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사회·문화 부분에 대한 취약성을 가짐으로써 교육과정상의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웠으리라

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정치>의 Ⅲ단원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과정’에서는 언론의 중립성을 생각해보는 ‘탐구활동’에서 ‘북한핵 보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 아래 언론의 북한 보도가 반통일적이었다는 연구 논문의 주장을 게재했다. 이 탐구활동의 요지는 언론이 “북핵 문제에 대해 핵을 개발하는 동기를 고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 뒤에 숨은 동기, 정책, 전략, 협상, 행동양식, 태도를 종합적이고 폭넓게 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sup>126)</sup>는 것으로서 북한 내용의 기술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실적 사실들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V 단원 ‘국제관계와 한국 민주 정치의 과제’에서는 다극화 시대의 탈이념·실리위주의 외교를 전개는 우리에게 북한 뿐만 아니라, 미·일·중·러 등 여러 나라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sup>127)</sup> 안보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북한과의 대치상황과 그에 따른 적대적 감정을 부추기던 반공교육기의 안보관과 대비를 이룬다.

또한, 사상적 측면에서도 북한의 민족주의를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로서 이는 반식민주의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내세워 대내적 통합을 달성하고 산업화를 이루려는 특징’<sup>128)</sup>으로 한다고 설명함으로써 북한 사회에는

---

126)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정치」(서울: 교육부, 1996), p. 102.

127) 위의 책, p. 249.

128) 위의 책, p. 252

폭력과 모순과 이에 따른 불합리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가치를 전달하던 반공교육기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남북한 경제 협력의 추진 내용과 경과에 대해 기술했다.

남한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대별되게 북한은 대외원조의 격감으로 경제적 교역의 대상이 필요하며 그들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더라도 북한에 대한 동포애로서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대북 경험의 목적, 성과, 이에 기반한 대응 방안의 모색이 아닌 ‘동포애’로 일축해 버리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북한은 전통적인 문화가 많이 변질된 사회로서 남북한 주민 사이에 이질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남북 분단의 역사는 우리민족 반만년 중 1/100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동질적인 요소를 찾아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공동체 의식과 윤리,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 더불어 사는 지혜, 인간 본위의 세계관, 정신적 세련됨과 고상함이 우리 민족의 전통이라고 하면서 이를 응용하여 통일에 대비하자고 진술하고 있다.<sup>129)</sup> 그러나, <사회문화>교과서의 본문 총288면 중에서 한면도 안되는 공간에 할애된 남북문화의 이질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형식적이고 당위적 차원에 머물렀다.

---

129) 윤덕중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서울: 금성출판사, 1997) p. 252.

<표4-6> 제6차 교육과정 관련 내용 추출 어구

구분 영역	설명적 어구 (explanative)	평가적 어구 (valuative)
정치철학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정252) (계급과 계층의 개념을 설명하면서)마르크스 이론 소개(사85)	타당성을 잃은 하나의 실험(경17)
북한정권 (정치현상)	1인 독재 체제(정252) 대남 적대(정252) 남한과의 경제발전격차를 의식하여 남한과의 직접적 접촉을 기피(경236)	변화(시켜야 할) 대상(정252) (남북대화)소극적(경236)
군사외교	남침(6·25)(경227) 제한적 개방과 외자유치 정책 고수(경237) 국제관례 무시(경242)	폐쇄적(경236) 일관성 결여(경242)
경제	대외원조 격감(경242) 대외원조 격감(경242) 일본·중국·국제연합개발계획·국제연합공업개발·국제연합주관에 경제협력 요청(경243) 1991년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로 지정(경241) 경제침체(경241)	(남한과)언어·문화 같음(그러므로 경제협력에 유리)(경241)
교육·문화	남한과 이질적(사252)	.
북한주민생활	(사회주의 체제로 인해)가족제도·친족제도 등 전통적인 문화가 변질(사252)	.
명칭	전체	북한, 한민족, 동족(경237)
	정권	정권(경241)
	국민	주민(사252)

※( )안은 과목명과 출처의 해당면(과목명, page)

정: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정치」(서울: 교육부, 1996)

경: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경제」(서울: 교육부, 1996)

사: 윤덕중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서울: 금성출판사, 1997)

### 3. 평화통일 교육기

평화통일교육기는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표4-7>에서와 같이 7차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안보교육기에 비하여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증가했으며,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이슈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교과서에 직접 제시하는 부분, 북한 산업 구조를 도표로 제시하는 부분,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구체적 예로 설명하는 부분 등은 직접적으로 북한에 대한 서술과 평가에 치중하던 기존의 교과서들과 차별된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제공된 1차 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인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치>교과서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남·북·중의 3각 대응이라는 제목의 탐구활동을 신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경계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국제문제에 있어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동지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는 IV단원, ‘국제사회와 정치’의 소단원에서는 북한의 인권,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은 현재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어 많은 북한 이탈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길수 가족의 예’를 들어 북한 이탈 주민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0 미래신문 만들기’의 탐구활동에서는 ‘미국의 마이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대통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마이클 대통령의 대북강경책이 남북대화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미국의 태도변화를 강력히 요구하였다.’<sup>130)</sup>라는 가상의 내용을 설정하여, 현재 북·미관계의 갈등과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7차 교과서에서는 6차까지의 고정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을 직접 전달하기에서 벗어나 외부 매체나 기관의 문건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현안을 직접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교과서와 구별된다.

남북관계의 측면에 대한 서술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남한과 북한을 통일의 당사자로 놓고 “우리의 관계는 국내정치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sup>131)</sup>고 설명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이 통일에 있어 한배를 탄 동지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하지만, 5차 교과서에서와 같이 북한의 정치체계를 비롯한 북한 사회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직접적인 설명은 찾기 힘들다. 다만, 북한의 ‘헌법’을 소개<sup>132)</sup>하면서 남한 경제체제와의 다른 점을 소개하는 부분은 남한과 북한과의 이질화의 원인을 체제적 입장에서 생

---

130) 최병모 외 5인, 「고등학교 정치」(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p. 219.

131) 위의 책, p. 274.

132) 김진영 외 4인, 「고등학교 경제」(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p. 33

각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에 대한 소개는 남북경제협력이 중요한 이유와 발전방향을 생각해보도록 함에 목표를 두고, 북한의 경제지표·교역 규모 등을 남한과 비교하여 그래프나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북한 자료의 제공은 보다 현실적으로 북한 및 통일 문제에 접근하려는 방법적 시도로 파악된다.

7차 교과서의 북한 관련 내용 전달에 있어 구별되는 점은 북한의 정치 지도자의 얼굴이 사진으로 직접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sup>133)</sup> 이는 6·15 공동선언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가 어떻게 교과서에서의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뀌게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나란히 같은 크기로 배치되어 있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모습은 교과서에서 그를 북한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안보교육기에서 북한 정권을 대남적대, 남한과의 경제발전격차를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대화를 회피하는 존재로 설명했던 부분과 대조된다.

북한의 주민생활이나 문화적 측면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다. 이산가족의 문제 등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sup>134)</sup>하거나 언어적 차이를 설명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북한 문화의 제분야를 정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 주제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33) 김태현 외 4인, 「고등학교 사회문화」(서울: 금성출판사, 2003), p. 252.

134) 위의 책, p. 258.

<표4-7> 제7차 교육과정 북한 관련 내용 추출 어구

구분 영역	설명적 어구 (explanative)	평가적 어구 (valuative)
정치철학	마르크스 이론(계급과 계층을 설명하면서)(사80) 주체사상(연방제 통일방안을 소개하면서)(사260)	.
북한정권 (정치현상)	(대한민국헌법상의 경제 관련 조항과 북한의 헌법 조항을 비교하며)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경33)	.
군사외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반대(정186) 미국과 갈등(간접적 서술)(정219) 주한미군 철수 요구(정263) 무장공비침입(정266)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비교)(사260) 대남혁명전략(선 남조선 혁명, 후 통일)(사260)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남한공산주의 합법화·미군철수 주장(사260) 현(現)낮은 단계의 연방제 제시(사261)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남한과 공동 대응(정186)
경제	(도표를 통해 남한과 비교하여)농업·공업·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268) 남한과 경제 협력 진행중(정265) 계획경제(정33) 남한과 경제 격차 심화(경221) (남한과)경제협력 사업(경242) 1995년 현재 군사비 GNP 대비 25%(남한의 3.4%와 비교하여 표로 제시)(경223)	공평성에서는 계획경제가 장점, 효율성에서는 시장경제가 우위(경37)
교육·문화	남한과 이질화(정269) 남한과 사회문화 교류중(정269) 남한과 언어적 차이(이질적 북한어를 예로 소개)(정269)	동질성 회족의 대상(정269)
북한주	빈곤·기아(정206)	.

민 생활	인권 보장이 안됨(정209)	
명 칭	전 체	북, 북한
	정 권	북한정권(정266)
	국 민	주민, (남한과 같은)민족, 북한 사람(사263), 우리 동포(사263)
		※명칭 관련 특이 표현: (남북한 사람들 공(共)히)이 넘과 불행한 시대의 희생자 들(사263)

※( )안은 과목명과 출처의 해당면(과목명, page)

정: 최병모 외 5인, 「고등학교 정치」(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경: 김진영 외 4인, 「고등학교 경제」(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사: 김태현 외 4인, 「고등학교 사회문화」(서울: 금성출판사, 2003)

## VI. 결 론

### 1. 요약 및 평가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정책은 그 체제가 처해 있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므로 모든 정책은 환경에 대응하도록 형성(making)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결정(policy decision in national system)은 그 하부 체계(sub-system)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갖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일교육 정책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통일교육은 우리가 처해 있는 통일환경을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국가차원의 통일교육정책은 실제 학교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었던 통일교육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진행되었던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을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의 변화 분석을 통해 알아내려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반공교육시기(1948-1987)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 4차 교육과정까지의 시기이다. 국제적으로 미·소 양극 중심의 냉전체제가 공고화되었다가 미소 데탕트가 진행되면서 탈냉전의 조짐이 보이던 시기로서 국내적으로는 외부 세력을 배경으로 정권을 획득한 이승만 정권의 개인적 신념이 정책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대결적 구도가 형성되고, 군부정권에 이르러 이러한 반공이 정권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다. 사회 운동 세력들의 새로운 통일접근 논리는 강압적 정권의 통제 아래 정책에 거의 반영될 수 없었다. 이 시기 남북 관계는 남북한 양측의 자의적인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호 타협과 대화보다는 비방과 대결의 논리에 의해 진행되었다.

안보교육시기(1988-1997)는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정권을 창출한 노태우 정부와 최초의 민간인 출신 직선제 대통령인 김영삼 정권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교육과정상 제5, 6차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는 탈냉전의 시기로서 동구권이 몰락하고 소련 연방이 붕괴되었으며,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의 실리 외교가 더욱 가시화된 시기이다.

국내적으로는 제도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1987년 항쟁에서 자신감을 얻은 사회운동 세력들이 국가 정책 전반으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시기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 및 사회문화 부문에서의 교류 진전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기본 합의서를 도출하는 등 일단의

진전을 보인 시기이다.

평화통일 교육 시기(1998-현재)는 ‘개혁’세력으로 분류되던 김대중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의 시기로서 제 7차 교육과정도 포함된다. 이 시기는 미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 세계질서가 지배되는 시기로서, 한반도에 있어서는 일본과 중국의 군사대국화 노력이 표면화되며 소련의 한반도 영향력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시기이다. 국내적으로는 사회 각부문에서 상당한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나 1998년 IMF 이후 계속적 불황과 실업 문제 등이 사회 내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북·미 갈등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체제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미국으로부터의 자주국방을 외치는 진보세력간의 주장이 교차되고 있다.

둘째, 통일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반공교육 시기에 실시된 통일교육은 냉전과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를 반영하는 산물이었다. 미·소 양극화된 세계질서의 흐름 속에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한국정부에게 ‘반공이데올로기의 강조’는 국제정치의 구조 아래서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더욱이 6·25전쟁을 거치면서 반공의 가치는 국민적 지지의 수단이 되었고, 이후 군부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강력한 정권 안정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멸공·승공’이라는 명목 아래 대결과 경쟁을 조장하는 감정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반공교육기의 통

일교육은 해방초기 ‘방어적 반공’에서 6·25전쟁과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적대적 반공’으로 심화되어 군부정권에 이르러서는 ‘대결과 경쟁’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배제하는 매우 경직된 반공교육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안보교육기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재편 속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변화가 모색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남북관계는 매우ダイナミック하게 진행되었는데, 근본적으로 남북한 당사자들의 필요에 의한 접촉이 아니라 외부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접촉이었기 때문에 관계의 진전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기존의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와 안보의 위협자라는 균형된 인식 속에서 파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민주시민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일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평화통일교육기는 미국의 강력한 ‘힘’의 외교에 따른 국제환경의 불안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부적 민주화의 영향을 받아 과거 정부 주도의 일방적 교육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사회각계에서 다양한 논의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북한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북한이해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통일교육은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의 차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논의와 이에 따른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셋째, 각 통일교육 시기별 북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반공교육기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4차 교육과정까지의 시기로서 통일교육정책의 목표와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이 함께 변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1차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성’이 자리를 잡았고,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공고화되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4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고착된 이미지는 거의 변함이 없었고, 이질성이 강조되면서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내용이 전개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에서는 북한을 실지회복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철학적 비판에 사회과 교과서의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기의 시기는 정부의 반공교육 강조에 따라 사회과 교과서에 공산주의 비판 단원이 등장한 시기로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대한 기술이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그려지는 북한 사회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우리사회와 심각하게 이질화된 병리적 사회로 그려짐으로써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인식을 강요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기 일반사회 영역의 교과서에서는 ‘반공교육’의 강조를 위해 도덕과를 사회과에서 분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 교육과정과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공산주의 비판 단원이 없어지고,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는 단원이 신설됨으로써 경제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특히, 2~3차 교과서는 국가전체에 반공의 논리가 퍼져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각 단원마다 어느 주제에서나 반공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항상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점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은 4차 교육과정기까지 이어진다. 북한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회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반민족적이고 반적통적이며 반인간적인 집단으로 묘사된다. 이 시기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시사 정보”를 수업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게 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이념적 자유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공교육기의 사회과 교과서는 북한을 감정적 차원에서 비판하고 이질성을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북한의 이질화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안보교육 시기에 이르는 제5~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반공 위주의 통일교육이 대공산주의 경계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으며 북한을 대화와 대결의 균형선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과 교과서에서 북한과 관련된 비판적 내용은 삭제하는 조치로 나타났다. 이렇게 삭제된 공간엔 북한 정권을 하나의 정치기구로 소개하거나 남북한 경제협력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의 전달은 매우 제한적이고 조심스러워서 통일과 안보에 균형적 시각을 이룬다는 목표와 괴리를 이루고 있었다. 실상 이 시기는 사회과 교육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가장 적었던 시기로 몇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시기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관련 내용은, 반공교육기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방대한 서술과 너무나 비교되는 양적·질적 협소성을 특징으로 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시기는 북한 관련 정보의 ‘부재기’ 혹은 ‘공백기’라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북한 정보에 대해 나아가서 통일의 문제에 대해 취약하고 빈약한 내용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통일과 안보 간 균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통일교육정책의 목표는 실제 학교교육 현장에서 실현되기 어려웠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사회과 교과서는 남북한의 이질성을 방조·방관하는 교과서로 특징지을 수 있다.

평화통일 교육기는 제7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1998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가 증가했으며, 그 분야도 정치·정치·경제, 사회·문화로 확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교과서에 직접 제시하거나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구체적 예로 설명하는 부분 등은 과거 북한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직접 서술하던 기술 방식에서의 변화이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제공된 1차 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를 다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서론의 언급을 상기할 때, 사회과 교과서에서 북한에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2. 제 언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의 통일교육정책은 정권의 유지 목적과 결부됨으로써 국제 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통일교육 정책의 경직성은 사회과 교육내용에도 반영되어, 국제적 데탕트가 진행된 70년대에 있어서 우리의 반공교육은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교육정책의 경직성은 권위주의적 정부의 통치 체제에서 비롯되는 한계였다. 앞으로의 통일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 수렴 및 논의의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통일교육정책이 실제 교과서에서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반공교육기에서 안보교육기로 변화된 시기에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통일교육의 목표는 실제 교과서에서의 교육내용에 성공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통일교육적 입장에서 정책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이 면밀하게 조정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과 교육과정은 통일이 우리의 현실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교과서에서 교육내용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보다 ‘통일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은 보다 세심하게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과서는 북한 사회의 이질성을 확대하여 감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심리적 이질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공교육기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주제에 ‘반공’의 이데올로기가 녹아 있었고 기회가 닿으면 ‘북한을 비판·비방’하였다. 안보교육기에 이르

러 이러한 비판이 삭제됨에 따른 북한 정보에 대한 공백은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도 메워지지 못하였다. 이질성을 조장하는 데 교과서와 교육내용이 기여했다면, 이러한 남북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사회과 교과서는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정치철학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과감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는 김일성 유일사상과 주체사상에 기반한 사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어떤 식으로든 삼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치·경제·교육·문화·주민생활의 기본적인 특징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7차 교과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객관적 지표와 통계자료, 보도문 등을 이용한다면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북한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주제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탐구활동이나 학습자료 등을 통해 북한 정보를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서울: 민음사, 1998.
- 교육도서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력사: 고등중학교6」,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I」, 서울: 교육부, 1992.
-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해설서」, 서울: 교육부, 1998.
- 교육정책자문회의,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1990.
- 군정청·문교부, 「초중등학교교수요목집」, 1946.
- 권막학,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신대북 정책”, 윤정석 외, 「통일환경론」, 서울: 오름, 1996.
- 김강녕, “일·북한 관계개선 전망과 남북한 관계”, 「통일문제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92.
- 김경동, 「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 서울: 박영사, 1989.
- 김성주, “한국의교정책의 국내외적 결정구조”, 장을병 외,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 김완선 외, 「공산주의도덕: 고등중학교5」,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김용복, “김대중 정부의 남북관계 성찰과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경남정치학회(공편),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쟁점과 대안 모색」, 통일연구회 제16차 정책포럼 경남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주제발표문,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02.
- 김일영, “국민의 정부의 정체성: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이의 기로 선 김대중 모델”, 23회 학술회의 「새천년을 위한 한국

- 사회의 비전」 주제발표 자료, 1999. 10. 18.
- 노중선,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서울: 사계절, 1996.
-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1981.
- 문교부,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문교부령 제46호 별책, 1955.
-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1988.
-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3.
-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77.
- 문교부, 「중학생 새교육 과정 개요」, 1980.
- 서울대학교정치학과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02.
-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서울: 돌베개, 2001.
- 오수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통일전략회 편, 「국제정세변화와 통일전략」, 서울: 신지서원, 2002.
-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서울: 외무부, 1979.
- 외무부, 「한국외교 40년」, 서울: 외무부, 1990.
- 윤건영,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92 북한·통일연구 논문집(6)」, 통일원, 1992.
- 이근철·오기성, 「통일교육론」, 서울: 엑스퍼트 월드, 2000.
- 이남영,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성격과 리더십”, 김호진(편), 「한국현대 정치사」, 서울: 법문사, 1995.
- 이상우, 「함께사는 통일」, 서울: 나남, 1993.
- 이우영, “공존을 위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한국정치학회(편), 「21세기 남북관계론」, 서울: 법문사, 2000.
- 이원중, 「새로운 중국과 한국: 한·중관계의 역동성을 위하여」, 서울 : 나남출판, 2002.

- 이종태, 「분단시대의 학교교육2」, 서울: 푸른나무, 1990.
- 이창현·김태운, 「신국제질서와 남북한」,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법문사, 2002.
- 조한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최완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반성과 제언”, 백영철 외(2000)최태강, 「러시아와 동북아: 1990년대초 이후 러시아의 대중·일·한·북 외교」, 서울: 오름, 1994.
- 추병완 외, 「통일교육」, 서울: 도서출판 하우, 2002.
- 추병완,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452, 한국교육신문사, 1992. 6.
- 추병완, 「도덕교육의 이해」, 서울: 백의, 1999.
- 통일부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2004.
- 통일부통일교육원, 「2005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서울: 통일부, 2004.
- 통일부통일정책실,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5.
- 최현호, 「학교통일교육과 북한사회 이해」, 공주대학교 출판부, 2001.
- 한국도덕국민윤리과 교육학회 편, 「내용구조 개선에 역점을 둔 중학교 도덕과 교육개정」, 1992.
-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2001.
- 한명희,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교육월보」 123, 교육부, 1992. 3.
-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2. 교과서

- 고등학교 일반사회·정치경제 교과서 편찬 위원회, 「(인문계고등학교일반사회정치경제 I)정치경제」, 서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1975.
- 고등학교 일반사회·정치경제 교과서 편찬 위원회, 「(인문계고등학교일반사회·정치경제 II)사회문화」, 서울: 고등교과서주식회사, 1976.
- 김기석·박일경·육지수·한기연, 「인문계고등학교 일반사회」, 서울: 동아출판사, 1974.
- 김진영 외 4인, 「고등학교 경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 김태현 외 4인,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금성출판사, 2003.
- 박일경, 「(고등학교공민)경제와 사회」, 서울: 사조사, 1962.
- 유진오, 「(고등학교공민)정치와 사회」, 서울: 일조작, 1956.
- 윤덕중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금성출판사, 1997.
- 장경학·한상범·김하원, 「인문계고등학교 일반사회」, 서울: 교학사, 1968.
- 최병모 외 5인, 「고등학교 정치」,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 정치」, 서울: 교육부, 1996.
-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고등학교 경제」, 서울: 교육부, 1996.
- 한태연, 「(고등학교사회과)문화의 창조」, 서울: 일한도서, 1956.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사회 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4.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사회 I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5.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정치·경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학교)사회·문화」,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3. 논 문

남상현, “고등학교 통일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 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박찬석, “한국의 통일교육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1998.

선순철, “통일에 대한 인식 태도와 통일교육 개선방향 연구”, 인천대학  
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1990.

이재봉. “한국 정치교육 발달의 체계적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논문, 1991.

주정연, “통일환경 변화와 민주시민교육”,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  
3집, 1996.

최선옥, “한국 통일교육 변천 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 논문, 2004.

한정도, “90년대 통일교육의 방향”,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90.

#### 4. 신문 및 간행물

The Age, 2003. 2. 15.

동아일보, 2005. 4. 26.

동아일보, 2005. 5. 31.

이상민,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국”, (내일을 여는)역사 제5호, 서해문집,  
2004.

한겨레, 2004. 9. 30.

한겨레, 2004. 12. 10.

한겨레, 2005. 4. 24.

한겨레, 2005. 4. 24.

한겨레, 2005. 5. 3.

#### 5. 외국문헌 및 번역본

Easton, David, *A Far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5.

Frey, Eric, *Schwarzbuch USA*, Frankfurt: Eichborn, 2004. : 추기욱  
역, 「정복의 역사, USA」, 서울: 들녘, 2004.

Huntington, Samuel P, "America's Changing Stategic Interest", *World  
Politics*, 25(April), 1991.

Kuhn, T.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1970 : 조형 율김,

-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Nye, Joseph S,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71/2), 1  
1991.
- Ole R. Holsti, "Evaluative Assertion Analysis", Robert C. North, et al.,  
eds., *Content Analysis*, Evanston, III.: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3.
- Wohlforth. William C,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21/1(Summer) 1999.
- 선우학원, 최옥자 역, 「한·미 관계 50년사 :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서울: 일월서각, 1997.

## 5. 웹사이트

- 국방부, <http://www.mnd.go.kr>
- 교육과정정보서비스, <http://www.kncis.or.kr>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뉴스존닷컴, <http://www.newszon.com>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북한 자료 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 통일정보센터, <http://www.neopeace.net>

# ABSTRACT

## **Conversion in *Paradigm* of Unification Education and Change of Contents related to North Korea in *Textbooks***

- Based on the Territory of General Social Studies of  
High School

**Kim Young-A  
Major in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formulate the relationship of the conversion of paradigm on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change of content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under the ultimate goal of presenting the social studies *textbooks* to respond to the unification environment with the improvement and suppl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contents related to North Korea in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Considering the complex characteristics in unification education, the cont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has to be analyzed in relations to the larger frame of the environment and recognition, and considering that the unification is one of the historic processes, reviewing the

change of contents in unification education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The researcher considered the complex factor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and classified the time of paradigm on unification education as the time of anti-communism, the time of security education and the time of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by taking a look at the process of change in unification education environment and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and analyzing the contents related to North Korea within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The major result outcome of this thesis shall be as follows.

First, the time of anti-communism education (1948-1987) was the period of the first process of education through the fourth process of education that the cold war system was solidified at first with the detente in international stage. The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was still at the formal level to make up the passive response to the changes of external environment. In particular, with unification used as the political mean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s under Lee Seung-man, Park Jung-hee and Chun Doo-hwan that the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had the confrontation and propaganda-oriented rigidity. Therefore,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of this time described North Korea as completely different being or deep heterogeneity from us in all phase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hat the result was the maximization of hostility and deepening of heterogeneity.

Second, the security education period (1988-1997) was applicable for the Roh Tae-woo regime and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at it included the fifth and the sixth process of education. Internationally, it was the time of breaking away from the cold war system with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while the practical diplomacy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became more visualized. Domestically, the systematic democracy has some progress with the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had progress in exchange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arts along with formulating the basic agreement in political terms. Reflecting the flow of such change, the efforts of objective in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shifted from the balanced line of communication and confrontation. However, the contents related to North Korea within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was reduction or deletion of vast amount of criticism on the North Korea society in general and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 was consciously provided with much of restriction.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eriod can be made as the textbooks that aiding and abetting the heterogeneity of South-North Korea.

Third, the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period (1998-present) is the time to present the 'North Korea Embrace Policy' under the Kim Dae-jung regime and its successor Roh Moo-hyun regime that includes the seventh process of education. This is the time that the powerful US controls the world order that the North Korea-US conflict from the nuclear issue has become another conflict within the Korean Peninsula. Domestically, a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each sector of society but the economic difficulty after the IMF Crisis has been the main factor for social instability. This is the time for actively undertaking various discussion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that the efforts to undertake unification education has been made in realistic and practical level rather than the unification education under the compulsory and emotional level. In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of the seventh process of education period, there were quantitative increase of information on North Korea as well as opening up the possibilities to think on North Korea for

students by providing diverse North Korea related information by breaking *away* from the previous description of value and attitude. A great implication may be found by having the textbooks providing the opportunity of interpretation and discretion for the students, not by delivering the perception on North Korea directly, but through the indices and basis provided.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has to maintain to value neutral attitude on North Korea in a *way* of supplementing the details in the direction *with* the basic contents of politics, economy, social and cultural reality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by specifying the contents of education following the goal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process of education as more sophisticated document, the consistency of the goal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contents following the objective has to be obtained.